

제434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7일(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4.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5.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6.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7.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8.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9.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1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1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12.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13.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4.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15.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16.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17.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18.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19.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20.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3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4
4.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4
5.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4
6.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4
7.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4

8.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4
9.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4
1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4
1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4
12.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4
13.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4
14.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4
15.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4
16.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4
17.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4
18.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4
19.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4
20.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4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성원은 되었으니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임기지만 선배·동료 위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위원장에 선출된 것 자체가 저로서는 큰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소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예결위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만큼 아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고참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지역구의 전통시장을 들렸습니다. 상인 한 분이 저에게 비닐봉투를 흔들면서 ‘석유가 안 들어와서 이 비닐봉투도 못 만들게 된다는데 비닐봉투 좀 부족하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또 아내의 심부름으로 집 앞의 슈퍼에 가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러 갔는데 그 슈퍼 사장님이 ‘손님들이 한꺼번에 여러 묶음을 사 가다 보니까 다 떨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묶음씩만 팔 것을 그랬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동 사태의 파고가 우리 국민의 일상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중동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또 고환율까지 겹쳐서 산업경제는 물론 가계, 민생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비상사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은 그런 긴박한 사정 때문일 것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코피를 쏟아 가면서 밤을 새워서 추경안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노고에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충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추경의 시급성만큼 빠듯한 심사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자리에서 하면 될까요?

○**위원장 진성준** 예, 그러셔도 됩니다.

○**김현정 위원** 이번에 이병진 위원께서 사임하셔서.....

○**위원장 진성준**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현정 위원** 안 들리나요?

○**위원장 진성준** 이제 들립니다.

○**김현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이고요, 정무위 소속입니다.

이번에 3월 20일부로 보임하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심사 열심히 잘해서 중동사태로 인한 위기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현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결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진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촉박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진성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7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고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 추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간사님, 안도걸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국민의힘은 박형수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0항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4.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5.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6.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7.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8.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9.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1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1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12.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13.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4.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15.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16.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17.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18.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19.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20.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10시15분)

○**위원장 진성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4월 9일 목요일 오후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접수는 내일 회의 산회시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합정책질의 종료 바로 다음날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간사님들과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내일 오후 6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전에 각 의원실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17개 기금 외에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체회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민생 위기라는 긴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차단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에너지, 물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서민의 생활비 부담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도 동시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을 2.7%까지 상향한 것은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운용하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민생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 이하 취약계층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노동자·청년의 민생안정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고용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상황 악화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인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노동자 등에게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민생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산업의 피해 최소화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이 시급한 석유나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재원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을 활용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위기대응과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재정에 9조 7000억 원을 보강하고 추경이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원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하여 현장에

서 추경의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1970년대 오일쇼크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경제 도약의 기회로 바꿨던 위대한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의 중동사태를 엄중한 경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동사태 관련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에너지, 물가, 금융시장, 민생, 복지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강도 높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절약과 합리적인 소비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제, 민생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존경하는 진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고유가 충격과 해운 물류 불안이 심화되고 그 여파가 민생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국민 실생활부터 기업의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낮은 곳부터 잠기고 불길의 메마른 곳을 먼저 태우듯 고유가·고물가의 어려움은 구조적으로 보다 취약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에 더욱 크게 미칩니다.

특히 금년 2월 기준 청년 고용률이 2024년 5월 이후 2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쉬었음 청년’은 약 49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과급되어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우리 경제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번 추경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조 2000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채 상환에 1조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및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투자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본예산 대비 0.1%p, 1%p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5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과 함께 나프타 수급의 추가 소요와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을 보강하기 위해 예비비 5조 원을 증액합니다.

자율적인 차량 5부제의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p 상향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이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5만 원 상향하고 농어민과 영세 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고유가 민감계층의 에너지 복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현 상황으로 어려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랑드림센터를 전국 300개소까지 2배 확충하고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도 각각 약 1만 6000건, 2만 8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하고 채도전에 나서는 분들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늘립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만 명 늘린 4만 8000명에게 지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높아지는 청년들의 취업·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하여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해 스타

트업 창업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쉬웠음 청년이 구직의 장애 나설 수 있도록 대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넓혀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미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만 5000명 확대된 6만 5000명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여행·숙박·영화 등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문화·관광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셋째, 우리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수출기업과 산업의 위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물류·유동성 지원을 폭넓게 보강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2배 확대된 1만 4000개사에 지원하고,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을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석유화학·철강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을 업종별 수요에 맞추어 지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방향을 바로 세우면 위기는 혁신과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글로벌 위기를 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로 삼고자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에너지 전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을 약 700개소까지 4배 이상 확대하고 10만 가구의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새롭게 보급합니다.

문화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 약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제작영화에 이르기까지 영화 제작을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산업·제조 분야의 AX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50억 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AX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여 제조 공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석유와 핵심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 석유 비축 130만 배럴 확대 등에 총 7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넷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9조 5000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투자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현재 중동 전쟁의 충격이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며 우리 경제의 문턱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불길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피해가 더욱 커지듯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공급망을 조속히 복구하지 못하면 그 복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체 없는 신속한 대응입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신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박홍근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이하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부분은 생략하고 8페이지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의 편성 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의 대외적 충격이 지속될 경우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등 이번 추경안에 다수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매칭 지방비 적기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재정 여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다층화된 국비 지원을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생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추경의 일반적 요건과 이번 추경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추경안에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15페이지 재정총량 및 재정건전성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25.4조 원이 증가했고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25.2조 원 증가했습니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1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정수지와 재정건전성이 소폭 호전되었으나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나라 재정여건의 위기로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나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의무지출 구조조정, 조세특례 정비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세입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415.4조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2조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 4개 세목이 증액된 반면 개별소비세 등 3개 세목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입경정은 다소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에 대해 정부의 세수추계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세입 증액경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보다 1.7조 원 적은 413.8조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추경안의 재원입니다. 정부는 총 26.2조 원의 필요재원을 초과세수 25.2조 원, 기금 여유자금 등 1조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2월에 확정된 한국은행 잉여금과 가결산 등으로 파악 가능한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을 이번 추경안의 재원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세입추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5조 원 증액된 9조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목적예비비가 본예산 대비 5조 원이 증액된 8조 2000억 원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소요액 등 총 5조 원의 예산을 전액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는바 예측 가능한 소요액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유형별 검토입니다.

먼저 고유가 부담 완화 관련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본예산 대비 10.1조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의 하단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소비진작 등 당초 목표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중단입니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증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의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민생안정 관련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본예산 대비 2.8조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입니다.

일부 사업은 제한된 일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조속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42페이지 중단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증액사업 중에는 2025년에 추경안을 통해 사업을 증액하였으나 해당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있는바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는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관련입니다.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본예산 대비 2.6조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비용 지원을 위해 각 부처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바 바우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급기관의 서비스 품질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약 7.1조 원 규모의 보험·보증 등 정책금융을 확대할 예정인바 보증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증 심사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진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짧은 시간에 추경을 편성하시느라고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첫 질의를 먼저 드리면서 총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발이 묶여 있는 배가 몇 척이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6척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안쪽에 26척이 있고 밖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배까지 하면 약 40척이 있지요?

한번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적의 배가 발이 묶여 있는 게 약 40척 있습니다. 내부에 26척 그리고 물건을 싣고 가서 하역을 못 하고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배까지 해서 40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이 선박에 탑승되어 있는, 승선된 인원이 140명 내지 180명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해협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통과하는 나라는 또 누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최근에 일본이 됐는데 거기는 보니까 선사가 일본 선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란 관련, 친이란이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해외 뉴스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이슬람 국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가 통과를 시켜 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부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나 또 선사들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답답하겠지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토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 한국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 속말로 해서 꽤 씹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4월 1일 날 했는데 오늘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나라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행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싱가포르의 말라카해협 그다음에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해협, 쓰가루해협, 보스포루스해협 이런…… 보스포루스나 쓰가루해협은 일본의 영해고 튀르키예의 영해입니다. 영해지만 통행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호르무즈에서 통행의 자유를 보장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보장을 못 받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해군의 역할 중에 해양 통제와 해상교통로 보호가 우리 해군의 임무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도 당연히 자신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통행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해군이 가도 국제법에 하나도 저촉받지 않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미국의 협조 여부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유조선 한 척을 실제로 호르무즈해협에서 어떠한 상태로 나올 수 있는가? 이지스함 한 척과 호위함 한 척이면 두 척이 유조선 한 척을 호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호르무즈해협까지 가는 거라도 한번 검토해 봤냐,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은 군사적인 상황……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군사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NSC에서 검토를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산인 우리 국적의 배가 지금 발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풀려나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국제법에도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덴만에 지금 우리 배가 한 척 나가 있지요, 군함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한기호 위원** 아덴만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이지스함만 한 척 더 보낸다면 충분히 호위합니다.

위협은 미사일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 위협이 있고 기뢰 위협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기뢰는 이미 다른 나라 배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로가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과 드론 위협인데 이것은 이지스함 한 척이고 호위함 한 척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란하고도 협상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우리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무관을 봤을 때, 지금 보십시오. 이란에는 우리 무관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UAE는 지금 대사도 없습니다. 대사가 작년 9월 달에 소환돼서 들어오고 나서 지금 대사도 없습니다. 실제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빈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군 출신이지만 여기에 대한 통과를 위해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수 있는 무력을 필요하면 출동할 수 있다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못 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국가가 아니예요.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재래식 전력은 전 세계 다섯 번째 순위에 이를 만큼 강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배가 지금 안에서 스물여섯 척이 묶여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검토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한기호 위원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안 했다고 단언해서 얘기하냐면, 국방부장관한테 질의했어요. 이지스함이 우리나라에서 호르무즈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물어봤습니다. 부총리님도 모르시지요? 알 수가 없지요, 안 했으니까, 아무도 거론 안 했으니까. 여기 아시는 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물어봤냐. 소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해정이 가는 데 얼마 걸리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다 대답이 정상적이지 않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무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주권국가입니까? 세계 군사력 다섯 번째 나라입니까?

다음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이번에 편성된 농식품부의 분야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기계용 면세유에 대한 편성 그다음에 무기질비료에 대한 편성 이것이 충분한 액수가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기호 위원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 면세유 같은 경우는 요구가 1305억 이렇게 신청 요구를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편성한 것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그게 지금 농기계에 들어가는 경유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들이 모든 유종에 대해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농기계 면세유는 제외된 채 시설농가의 난방용 연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제 여름이 옵니다. 지금은 난방용 유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요로 한 농기계, 지금 농사짓는 데 필요한 농기계 유류는 안 해 주고 필요 없는 난방용 유류를 편성하느냐 이거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난방용 등유의 경우도 3월, 4월에는 저녁 가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그건 물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것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농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또 지금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필요한 액수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우선 무기질비료가 가격이 20%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실제로 요구액에 비해서 못 미치게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실제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인구 증가 현황입니다. 저기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요? 돈을 주니까 인구가 늘어난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연천에는 철원에서, 가평군에서, 양구에서 전입됐습니다. 정선, 영양, 옥천, 순창, 전부 다 인접한 군에서 들어간 거예요. 실제 저 인원들이 완전히 이사를 갔느냐 안 갔느냐는 제가 못 하고 일단 주민등록을 옮긴, 전 주소지에서 옮긴 사람들이 저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 편성할 때도 예결위에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한 군에서 그리로 전입 요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군을 지정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농민들이 필요한 유류나 무기질비료 여기로 편성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것은 뭐니까? 바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농민들한테 가는 것은…… 농업용 유류와 무기질비료를 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하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으로 편성된 추가 지역은 빼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한기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10개 군의 인구 이동 일어난 것을 잠정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수도권에서 이동한 비중도 26% 정도 됩니다.

○한기호 위원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인접한 곳에서 이동한 현황만 뽑은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그거는 있지만 소수이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담뱃값을 올린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아니라고 하고 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복지부장관님, 얼마를 올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WHO 기준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10년 계획에는 담겨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언제부터 올려요? 언제부터 올립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10년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결국은 추경을 편성하고 이래서 돈을 쓰고 국가가 자꾸 부채가 쌓여 가니까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담뱃값 올리는 거 아니에요, 소줏값 올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거는 21년에 마련된 계획의 10년의 장기 방향에 제시된 거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호 위원 소줏값 올리는 것도 복지부장관님 소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건강부담금은 건강증진법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호 위원 소줏값은 얼마나 올립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도 음주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정책으로 제시가 된 방향이고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아직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처장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를 금년도에 합니다. 본래 이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마리 지역까지 가는 것을 그걸 중간에 한 반쯤 자르고 이렇게까지 양보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실망이 엄청날 겁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 절차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초짜라 가지고…… 지역구를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읍의 한기호 위원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전 유성구의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를 황정아 위원입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윤석열 정권이 망쳐 놓았던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 중동 전쟁이라는 큰 파고를 만난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 이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정부와 한국은행 2.0% 그리고 OECD 2.1% 등 윤석열의 폭정과 무능, 내란의 상흔이 차마 낮지 못했던 지난해 경제성장률 1%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바탕으로 선도형 성장과 완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작년 상반기에 0.3%였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1.7%에서 금년에 또 2%를 하면 0.3, 1.7, 연간 2%씩 이렇게 쪽 올라가는 와중에 중동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그 여파로 유류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OECD에서는 2.1%, 저희 보다 높게 전망했다가 1.7%로 이렇게 낮춰서 정부가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AI라든지 이런 대전환에 대해서는 전쟁하고 별도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 코스피가 2600선이 붕괴되면서 당시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한 2025년 4월 4일에 코스피지수가 2465,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 2025년 6월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6% 상승해서 2770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25일에는 꿈의 지수라고 불리는 6000을 찍었고요. 그다음 날인 26일에 6300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에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어제 코스피도 5450으로 취임 초기 대비하면 2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수준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펀더멘털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2.1%를 유지하고 있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1.9%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지금 일곱 번이나 발동이 났어요. 아직 경제 펀더멘털과 역동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총리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만 스물여덟 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중동 전쟁이 불가역적인 상흔을 남기기 전에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서 민생경제에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소비자심리지수나 또 이런 포워드 루킹(Forward-looking), 미래 전망을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계에 대한 먹구름, 구름이 몰려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도 그런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위기의 계곡은 더 깊어지고 회복탄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황정아 위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일까지의 추경 기한은 사실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노선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황정아 위원** 지난해 7월 4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17일이 지난 21일에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서는 이보다 집행 시기를 훨씬

더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가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추경도 최단기간 안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일에는 합의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저희는 이미 지금 조기 집행, 신속 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내부 준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만약에 추경안 처리 직후에 국무회의를 저희가 열고 또 재정 집행 관련된 회의를 바로 열 생각입니다. 긴급 재정집행점검 회의를 4월 11일 바로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정아 위원** 금요일에 통과가 되면—예정인데요—그 직후 주말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되면 다음 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바로 방금 말씀드린 긴급 재정집행 회의를 열어서 할 생각이구요. 이미 이 추경은 지방재정이 매칭돼야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관련된 회의를 사전에 갖고 있고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지방재정 재원으로 보장되는 사업들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방에서도 각 지방 추경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서둘러 달라,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후자들은 이번 추경을 ‘대표추경’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2022년 5월 지선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에 59.4조 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서 2차 추경은 5월 29일 62조 원으로 확정됐고요. 코로나 손실보상에만 24.6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다음 날인 5월 30일 월요일부터 바로 지금이 시작됐고 그리고 직후인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었고 그때 무슨 입장을 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황정아 위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민의 삶을 살리는 것이 정치 본연의 책무, 대승적 추경 처리 결단해 달라’라고 호소하셨었습니다.

장관님, 진짜 정치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와 연관된 사안이라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정치를 대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도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계시고 또 10일 날 합의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고유가 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는 상황을 호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지점은 수요가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공급 충격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 수요와는 별개로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높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물가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월 미국 연준 의장 역시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에서 일차적으로 공급 충격은 어떤 종류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라며 일시적 영향을 꼬집은 것 역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공급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면 편성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선제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이렇습니다. 마치 냉장고가 텅 비어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당장 먹거리, 생존을 위해 쓰지 않고 나중에 노후 자금이라든가 또는 주담보 대출의 원금 상환에 모든 걸 다 쓰겠다, 오늘 받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공급 충격발 경제위기를 그대로 두면 오히려 민생 혈액이 막혀서 향후에 더 큰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반대 논리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닌가,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오일쇼크 시대의 대안인 재생에너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부처 기후기술 R&D 예산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인 태양광·풍력 예산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723억 원에서 2025년 1208억 원으로 30% 급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주의적 재생에너지 멸시의 결과입니다. 오일쇼크에 대응할 재생에너지가 그 골든타임마저 속절없이 흘러보낸 것이지요.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추경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번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국가적 과제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추경호 전 기재부장관은 공급 충격도 없었던 22년 5월에 50조 원 대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했었고 물가 영향은 정부 직접소비 대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전쟁 대응을 위한 추경마저 발목 잡는 그런 정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추경이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도약의 마중물이 되는 불씨 같은 추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에 담긴 청년 창업 그리고 일자리 지원 1.9조 원의 예산이 적시에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성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그리고 기초연구 예산, 연구자 처우 개선, 국가과학자 지원 예산 등에 이재명 정부의 불씨가 투입되자마자 이공계 성장의 사다리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수생까지 포함한 영재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2026학년도 기준 97명으로 전년 대비 60명이나 줄었습니다. 24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42% 급감한 수치입니다. 영재고·과고 출신

의 서울대 의대·치대 진학생들이 8명으로 25년도 19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공계 중시 국정철학,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이 만들어 낸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입니다.

일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모태펀드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역시 성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벤처·스타트업 등의 유니콘·테카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THE V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2조 1784억 원을 기록하면서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4% 급증했습니다. 특히 정부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한 국민성장펀드와 민간투자의 합작품,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의 6400억 원 규모 투자가 VC 시장의 훈풍을 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황정아 위원 국가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예산이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해 줘야지만 아마 그게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정책적인 의지가 명확하고 예산이 투입된 지 지금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서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작년에 예산 짜면서 AI 예산을 많이 늘린다는지 이런 노력이 아마 한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진짜 불씨가 되고 그게 활활 저는 살아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AI 시대에 하루가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합니다. 챗GPT가 검색을 대체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문장 하나 쓰면 코딩까지 해 주는 AI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약시키기 위한 불씨 같은 추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부총리님, AI 시대 창업은 쉬워지고 취업은 어려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예산도 변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였던 테슬라, 우주경제의 개척자인 스페이스X,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트로픽, 오픈AI까지 모두 시작은 벤처·스타트업이었습니다. 창업이 인재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국가 단위로는 천문학적인 국부를 안겨 주는 핵심 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동의합니다.

○황정아 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담긴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1.9조 원의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사업들 역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이 더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가 예산으로 그리고 성과로 증명해 왔듯이 이번 추경 역시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한 축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또 심리적인 어떤 충격까지 느끼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이 AI 창업 등을 통해 가지고 진짜 혼을 불어넣고 그래서 다시 활기를 찾고

또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최대한 이 청년들 예산은 반드시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한다면 지금이 대한민국 도약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초과세수가 좀 더 넉넉했다면 정부 차원에서 먼저 더 강력한 미래 도약 추경을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최대한 전망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산업을 키우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중동전쟁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될 텐데요. 저는 피지컬 AI 실증 지원 예산 등등 과감한 규제 특례 부여, AI 데이터센터 등등에 대한 경제적 심장을 AI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들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AI 대전환에 더해 가지고 저희는 그런 대전환 그리고 이 외에도 최첨단 기술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한국은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찾아오는 기회를 우리 한국이 잘 살린다면 진짜 글로벌 3강을 넘어서는 그런 성과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중동전쟁발 위기를 투자…… AI 투자처를 한국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창원 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총리님과 장관님들, 국무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마산합포의 최형두입니다.

우리 근대사·현대사를 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식민지 그 황무지를 딛고서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전쟁으로 잣더미가 되었고 보릿고개를 넘었고 중동위기를 맞고 외환위기를 겪고, 위기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새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 정부위원 되셔서 영광도 잠시고 엄청난 국가적 과제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무거워지려고 합니다. 밤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특히 이번 위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중동위기 이후에 최대의 위기고 거의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도 예결위원 하면서 아마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러-우전쟁이 예상 밖으로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러-우전쟁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랬지만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휴전 협정, 종전 협상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지옥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을 맛보게 할 것이다라는 거친 수사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경제위기의 지옥을 맛볼 나라는 우리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님들, 정부위원님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낮췄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반면에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7%에서 2.0%로 좀 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동 전쟁으로 받는 피해가 좀 클 거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70%나 원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에너지 의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2019년에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당신들이 해결해라. 우리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셰일가스를 만들 수 있고 원유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원유 순수입 비율이 4.6%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정인 일본은 1.8%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있고 지금 원전은 많이 늦어졌고 신재생에 급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까 정말 겁납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는 20%에 그칩니다. 그러면 이 긴급 중동 에너지 위기로 시작된 추경의 우선 목표는, 우선순위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입니까? 당장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나눠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중동발 위기에서 우리 민생을 구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근본적이고 신속한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를 열심히 하셔서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중동의 UAE 원유도 확보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 원유도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당시 야당이 그렇게 반대한 자원외교 그것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할리바 유전을 확보한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에 2042년까지 62억 달러 규모의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빚을 내는 예산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미 올해,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빚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우리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 줘야 될 돈을 우리가 줄여 주지 않고 다시 늘려서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 앞서서 어려운 민생을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못 할 그런 예산낭비, 빚 떠넘기기가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6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금 원유가 막히면 우리 반도체도 막힙니다.

카타르산 헬륨 비상입니다. K-반도체 지금……

예산처장관님, 지금 우리 초과세수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반도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최형두 위원 하반기에도 초과세수 나겠습니까? 지금 당장 카타르산 헬륨이 비상이 걸리면 우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수급이 안 됩니다. 지금 마산·창원같이 국가산단은 수출입 물류비 상승으로 지역 중소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십몇 조 되는 추경예산도 정말 정확하게 공급망 AI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자율제조AI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이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소비형 추경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투자형 안보 추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낭비성 예산, 휘발성 예산, 금방 휘발될 이런 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3대 핵심 투자로 예산을 재구조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과방위 예산 결의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대목입니다. 물론 너무 다급해서 충분한 예산을 짤 시간이 없었겠지만 과기부쯤 되면 저런 원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추경 때도 노력하고 노력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중동발 위기에서 당장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서 원자재를 구할 수 없는 이런 위기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 국내에 자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8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미국은 이미 이제 원유 수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만큼 다급하지가 않습니다. 다급하지 않는데도 지금 국방수탁법안을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심 광물과 원자력 부품 자국 내 생산에 강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산업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보실까요?

일본은 지금 에너지 믹스를 전면 재편하면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동 중단된 원자력의 조기 재가동, SMR 실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SMR 조기 개발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안 오셨는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러트닉 장관도 자주 만나 보셨어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지지난주에 한미의원연맹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가 팩트시트에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했으니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미 원자력협정 지켜라. 그리고 원전과 SMR 투자 공동 협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MR 굉장히 늦어져 있고 지금 초기 모델이 2034년 운영 목표인데 완전히 글로벌 시장도 뺏기고 우리를 에너지위기에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가서 테네시주에 히타치와 GE를 결합시킨 SMR 프로젝트 400억 달러였나요, 그걸 했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최형두 위원 우리도 지금 국내에서 SMR 수요를 일으켜서 SMR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본도 국내에서 SMR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테네시주, 왜 테네시주인 줄 아십니까? 빌 해거티라는 상원의원, 이번에 저도 만났는데 이분이 일본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지금 여한구 본부장님 그리고 산업부장관님이 협력해야 될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SMR 기술과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려고 그래도 지금 국내 수요가 금방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증사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늦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속화하려고 그러면 2000억 달러,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 정부와 협의해서 하게 돼 있지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습니다.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 과학위원장 그리고 브라이언 바빈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장, SST 위원장을 한꺼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텍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건설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세너터(Senator), 당신이 말이야 러트닉 장관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전화해서 한국 정부에 200억…… 몇천억 중에서 우리한테 몇백억을 달라,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짓고 있는 원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자’. 굉장히 관심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의원연맹을 통해서 왜 우리는 팩트시트를 이행했는데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 개정도 소극적이나, 심지어 미국 상원의원 4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할까 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연맹 외교를 통해서 풀 테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SMR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요를 금방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수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 막 발전소 없애고 줄이고 했었지만 해외에서 늘려서 그나마 원전산업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SMR도 그런 긴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 SMR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하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미시간에도 현대건설하고 홀텍이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에 아주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전은 건설산업에 가깝습니다. 큰 주기기를 만들면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엄청난 큰 주물작업을 통해서 주기기를 만듭니다. 이걸 바지선으로 싣고 가서 중동에 세우면 현대건설이나 우리 다른 건설회사가 가서, 건설산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SMR은 저는 가전산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마치 냉장고 만들듯이 국내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랬습니다. 미시간주 의원들 만나서 또 텍사스주 의원 만나서 ‘당신들 빨리 SMR 하려고 그러면 한국 SMR 기기를 우리가 가져올게, 거기에 붙이자, AI 혁명·전기 혁명 만들려면 속도가 중요한데 언제 미국 사람들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다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2000억 달러도 국내 SMR 원전 또 우리의 여러 혁신 산업에 미국 투

자가 되어서 투자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부와 교섭본부장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전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지금 뒤흔친 국내의 SMR도……

지금 SMR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창원에 있고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진북산단에 보면 지금 차세대 에너지 산업인 핵융합, ITER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우리 창원 마산 앞의 진북산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술 생태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바탕으로 지금 앞으로 SMR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필요할 텐데 이것을 마치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로 반도체를 석권했듯이 앞으로 폭증할 SMR 수요를 대한민국의 SMR 파운드리에서 석권하겠다는 걸 목표로 세우셔야 우리가 빨리 에너지위기에서도 벗어나고 국내에서 엄청난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정도, 이번에 1차 추정 또 2차 추정 생각하신다는데 이번 추정 심사 촉박하지만 가급적 줄일 건 줄이고, 외국의 이런 좋은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소기업 어렵다고 절끔 해 줬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당장 필요한 건 해 줘야지요. 해 줘야 되지만 이 제조업 AI, 아까 우리 황정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퍼지컬 AI와 자율제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술의 초격차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과기부총리께서 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기재부 부총리님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도 이 과기부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MAX 해서 산업부, 중기벤처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중동 에너지위기로 비롯된 것들이 우리 산업에 절망이 되고 눈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되어서 이걸 계기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해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12번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지방 씹짓돈 9.7조 추정 중에 이렇게 막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AI 허브를 구축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산업, AX 지원 펀드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지자체에 나누어 줘서, 선거용 씹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한테 좋은 공약거리 만들어 주지 마시고 나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한말씀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 관한 예산은요, 우리가 내국세가 100이 들어오면 40은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용으로 지금 한 9조 4000억이 내려가니까요……

○최형두 위원 이렇게 좀 재편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지방에 갔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방정부하고 잘 협조해서 저런 쪽이라든지 산업 경쟁력 쪽 또 지금 그 중동 전쟁으로 피해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예,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노종면 위원님 그리고 김현정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천 부평갑의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우리 국무회의 또 우리 내각에 대한 감사의 말씀 하셨는데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윤철 부총리께 여쭙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 텐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이것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이는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서로 돌려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게 마치 지금 당장 쓰레기봉투를 못 구하는 것처럼 하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막 사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가수요가 붙어 가지고 정작 사다 놔도 쓰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없어서 사고 이래서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도 또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소통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반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하셨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것은 진짜 국익을 저해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저는 중동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상황이 복합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허위조작정보와의 전쟁 상황이라는 인식을 우리 국무위원님들이 깊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례를 한 가지만 더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종량제는 지금 얘기했고요.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한다 이런 정보들이 흘러 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 환전을 금지시킨다 이런 것들도 다 허위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다 허위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저렇게 보도자료까지 내고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지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극우유튜버 전한길 씨 그 전한길 씨가 최근에 90만 배럴의 석유가 북한으로 빼돌려졌다 이런 허위조작정보를 유포시킨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고발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고발을 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금……

○노종면 위원 됐고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고발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것 윤석열 정부 때도 카피처럼 썼던 거예요. 허위조작정보의 해악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 정치 성향 불문하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인 조치를 하느냐에서 아마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요.

여한구 본부장님께 하나 더 여쭙보지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 제도, 배액배상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법은 통과돼 있고 시행은 7월부터 돼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전한길 씨의 저 주장은 법 시행 전에 나온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저 주장이 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도 유튜브에 게시돼 있으면 더 가중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정부 추경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가 전쟁 상황에서 피해를 더 키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어떤 항목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다시피 추경의 목적이 주로 실업, 일자리 문제라든가—창업까지 포함해서요—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긴급 대응 차원에서 설계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오늘 과방위에서 증액 항목으로,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이루어 냈는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 시기를 앞두고 필요한 조직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과방위에서는 했기 때문에 이번에 투명성센터라고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일선 기구,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이게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서 7월부터는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 법이 지난해 말에 통과되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되고 법이 통과돼서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전쟁 대비 추경을 편성하는 이 마당에 이 투명성센터를 7월에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추경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연히 법에 근거한 그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나를 저희로서는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에도 제가 살펴보니 이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 팩트체크 활동 지원이나 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 대비 한 두 배 정도 예산을 늘렸는데 이제는 법 시행으로 인해서 저렇게 투명성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만큼 관련된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또 방송광고진흥공사 통합 논의도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것과 또 연계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만약 추경이 안 된다면 당연히 법상 설치된 조직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잘 반영토록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반년 동안 필요한 기구, 특히나 지금 전쟁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 놓은 기구의 가동을 반년 이상 유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부총리께도 여쭙보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아주 강력합니다.

○노종면 위원 대통령께서 반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거기의 최일선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투명성센터입니다. 주관하는 부처는 방미통위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실 수는 없을 텐데 추경의 목적에 맞느냐가 남는 거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노종면 위원 전쟁 상황을 혼란케 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전쟁 추경의 취지에 반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게 엄밀하게 보느냐 또 넓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소위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할 걸로 보여 집니다.

○노종면 위원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윤호중 장관님, 이게 뭐 가짜뉴스의 범주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지방재정하고 매칭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이런 추정 편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이 더 어려워집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오해 이유가 지방으로 가고 이게 인구감소지역, 특히 특별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원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매칭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이미 그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이 내려갈 때 교부금을 훨씬 더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부금 증가액 가운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노종면 위원 수치를 보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축소했을 때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1조 3000억 원 정도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반면에 지방교부세로 내려가는 금액이 약 4조 7000억 정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4조 7000억입니다.

○노종면 위원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 매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그런 과제는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미 지방재정법에 국가보조금의 경우에는 추정 없이 즉각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저희 국회에서 4월 10일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모든 명단이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보자나 차상위층의 경우에는 즉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무리 늦어도 4월 마지막 주에는, 이달 마지막 주에는 가능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은 복지부의 건보 자료가 확보돼야 되는데요. 그 건보 자료가 만들어지는 데 약간의 시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정부 TF에서 별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앞서 황정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민생회복지원 쿠폰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17일 걸렸거든요. 그것보다는 당겨질 수 있도록 박홍근 장관님께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조금 전에 행안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단계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저희가 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건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 준비는 저희가 다 해 나갈 겁니다마는 하여튼 5월 중으로 지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종면 위원 국토부장관님은 자리에 안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광위원장입니다.

○노종면 위원 대광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노종면 위원 김용석 위원장님, 에너지 위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승용차, 내연기관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K-패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들어가 있던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K-패스를 많이 쓰면 환급해 주는 비율을 늘려 주겠다, 지금도 K-패스를 쓰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그 환급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K-패스는 일정한 금액 이상 쓰면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기준 금액이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K-패스 제도는 많이 쓰면 쓸수록 환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추경안을 보니까 비율 부분에, 정률제 부분에만 할인율을 높여주는 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사용액이 늘어서 정액카드로 전환되는, 정액 기능으로 전환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많이 써도 지금 받는 거랑 똑같이 받아요.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정책적인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쓰면 환급이 확대되는 그런 혜택을 보지만 많이 쓰면 지금과 똑같아요. 이 모순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액제 카드, 모두의카드 같은 경우에 정액제로 전환되는 기준을 낮춰 주거나 아니면 정액제로 전환된 이후에 환급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액에 아예 할증 비율을 적용해 주거나, 어떻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번의 정부안은 정률제, 환급 비율만 적용해서 50% 할인을 더 해 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 국민 체감을 위해서는 무제한 정액제에 대해서도 반값 할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국회와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시스템 준비는 문제없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저희가 이미 착수를 했고요. 하여간 빠르면 4월 분 추경도 환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노종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병의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먼저 이번 추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총리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당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정무위 소속의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 대해서 일각에서 왜 문화관광 예산이 필요하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현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이 가장 먼저 줄이는 소비가 바로 영화라든지 관광 그리고 숙박, 이런 문화관광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취약산업도 지원을 하고 또 소비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문화관광 지원 예산 3892억가량을 편성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중화권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홍보비로 30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지고도 이게 중국 추경이라고 하면서 험중 정세에 기대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현정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국 단체관광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무비자 조치 할 때에도 같이 이렇게 험중 정서를 자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조치를 최초 기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는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관광 수요 회복하고 관광업계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추경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경 이것을 편성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중국 관광객 쪽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외래관광은 외화를 벌고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 산업인데요. 거리가 가깝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김현정 위원** 한번 PT를 보시면 2025년도 작년에 외래관광객 1894만 명 중에도 중국 관광객이 548만 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여행 지출액도 요 1503달러로 전체 관광객 평균인 1327달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6억의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5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추계대로만 하더라도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1조 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추경이 중국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문화라든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다, 그게 정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추경이다라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험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24년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두바이라든지 카타르 등에 다녀온 관광객 수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 관광 수요가 안전한 곳으로 대체 관광지를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달에 한중 간에 정상회담 두 차례 한 이후에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지난 2월 달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무려 48%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관광업계를 뒷받침하고 외래관광 수요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다음은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서 9.7조 원을 내려 뒀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이와 별개로 매칭 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금이 1.3조라는 거고, 이 1.3조는 9.7조 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아까 설명을 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중앙이 지방에다가 돈을 내라고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확인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오히려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도 지역화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현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적절한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7개 시도의 지자체 단체장님들 중 12명이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김현정 위원 오히려 이 지방재정을 이렇게 많이 내려 주면 국민의힘의 지자체장들이 훨씬 더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30% 추가 매칭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택은 자유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 관련해서 명백하게 8.4조가 증액된다는 건 분명한 팩트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치공세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방에 내려 준 9.7조, 정부가 보강한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방정부에서 이번 추경의 취지에 맞게 늘어나는 지방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다음은 오늘 국토부장관님 안 오셔서 대광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지원으로 신규 279억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피해로 주거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이 고유가와 고물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역대 정부 통틀어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세특위 위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금액이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이 경·공매 끝나고도 세입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액을 채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것을 보증금의 절반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임차보증금의 2분의 1 미달 시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의 75%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PT를 보시면 정부 재난지원 체계를 보면요 농경지 피해 같은 경우에도 복구비의 60% 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또 어선청년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70% 수준까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또 자연재난 복구처럼 최소 보장률을 50%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이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속하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정 발의된 안에도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런 방향에서 추진될 걸로 봅니다.

○김현정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을지로위원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도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직접 간담회도 갖고 관련된 부분을 챙겨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유사 제도하고도 형평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논의사항도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이미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보증금 3분의 1을 선순위채권보다 우선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을 저기에 하고 계시는데 재난 복구비 관련해서도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30% 정도를 현금으로 보조합니다. 그런데 농경지를 말씀하셨는데 농경지 재난 복구 60%는 이진 말 그대로 주택은 30%지만 농경지는 주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사기 부분을 똑같이 대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그래서 관련된 법안이 지금 많이 발의돼 있고 곧 4월 달에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여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장 추경에 반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도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논의해서 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더 상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다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종량제봉투 여쭙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3개월 이상 또 50% 이상이 6개월 이상 재고가 있다라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현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은 많이 찾아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이 사태가, 결국은 종량제봉투 문제가 원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현정 위원 결국은 이 중동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나프타 공급 불안과 가격 충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도 했던 것 같은데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것, 이와 관련된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위원회에서 이번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정부 제안에는 없었는데요 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좀……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증액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상임위 단계에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상임위 단계에서 예비심사 하면서요.

○김현정 위원 제가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그러니까 재생원료를 사용해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야 되는데 설비 노후화율이 약 80%에 달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161억 증액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소위 심사에서 잘 상의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이것도 김성환 장관님한테 여쭙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랑 LNG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이런 고환율 상황에서 전력 생산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인데 그것이 국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현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소비체계를 줄이는 수요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정부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가전의 효율성을 높이면 아무래도 전기 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기후부 자료 확인해 보니까 추경예산을 한 2671억 투입해서 약 185만 건의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2.6조 원의 매출을 창출한 내수 진작 효과도 있었고 연간 48.3GWh의 전력 절감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업 수혜자의 약 86.7%가 중저소득층에 해당해서 민생 체감형 정책이다 이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래서 기후부에서 2800억 정도의 추경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김현정 위원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장관님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금액이 커서 이번 추경에 반영 못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질의를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 문제는 추경 사업의 취지 그다음에 지출의 규모 그다음에 말씀하신 효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지금 증액 요구가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소위 단계에서 살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지방정부 관련해서 이번에 부담이 혹시 더 증가하지 않느냐 이래서 행안부장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방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더구나 이번에 우리가 교부세 4.7조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정처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은 당연히 인구수가 적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내려보낼 때 더 추가로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더니 이번에 가령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각 지방비가, 지방에서 대응해야 될 것과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내려 주는 것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보통한 2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오히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교부를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정처의 지적이나 언론에서의 그런 분석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현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간신히 채워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해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경산 출신의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이번의 추경 규모가 26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고유가 대응이라든지 민생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피해산업 최소화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그리고 환율 상승…… 정말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 우리 경제가 위기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도 국내적으로는 오늘 반도체 1/4분기 나온 그런 아주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만 저희들이 잘 이렇게 좀……

○조지연 위원 우리 경제가 많이 위기인데, 생계비 부담이라든지 또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물류 운송업 피해가 막대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도 추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만들어진 이 추경이 어려운 곳과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투자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제가 보니까요 국세청 체납관리단 634억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규 사업으로 1500억 정도 신규 편성을 했더라고요. 체납한 사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전쟁 추경과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에서 국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려면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법 개정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에 맞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요……

○조지연 위원 물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꼭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말씀하시고 500명이었던 체납관리단이 9500명 증원이 된다 이게 얼마큼, 지금 이 전쟁 추경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업무를 위해서라도 국세청 본연의 업무도 위협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특별조사하겠다고 588억 증액했습니다.

제가 이 3개 사업을 총합해 보니까 한 2722억 원 정도 투입되던데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명목을 댄다고 하지만 이거 4개월 매우 단기 일자리인데다가, 이 예산이라면 화물운송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리고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배달라이더라든지 생계형 운송업자들에게 오히려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 지원에 385억 원, 공연·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에 412억 원,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마케팅 지원 50억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짐 옮겨 주는

집캐리 서비스 5억 원, 고유가로 물론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게 문화예술 분야라고는 하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체육인은요? 정규 예산에 포함돼도 충분히 되는 항목들인데 저는 나아가도 너무 나아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편성된 TBS 교통방송 운영 지원금 50억 이것도 고유가 대처에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편성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4조 8252억 원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4조 8000억대……

○조지연 위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그리고 최대 60만 원까지, 그러면 수도권 하위 70%에게는 10만 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인구소멸지역 같으면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역화폐로 준다는 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이게 편성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사실은 고유가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는지 또 대중교통 요금 그런 쪽에 자주 써야 되는 부분하고……

○조지연 위원 장관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 국민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그리고 하루에 수백km 달리는 화물차 기사·택배 기사 그리고 운수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배달라이더 이런 분들께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70% 국민에 분명히 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중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이들에게 10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유류비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대형화물차 기사들의 이런 호소·절규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그리고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유류보조금을 대폭 지원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어려운 분들을 더 돕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 가령 화물차, 택시, 택배 관련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건……

○조지연 위원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세에 자동차 통행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지연 위원 지방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게 매년 한 6000억가량이 그동안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설계다 말씀드리겠고 푸드트럭은……

○조지연 위원 그리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미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우리가 경영안정 바우처를 이번에……

○조지연 위원 그게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이분들의 업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분들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반영 대상이고요.

○조지연 위원 반영해서 이분들에게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조지연 위원 추경 목적에 민생안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민생안정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장바구니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바구니물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비 구조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생산비 절감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무기질비료 원료의 100% 가까이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얼마를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처에? 얼마를 증액해야 된다고 제출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제출한 것도 있지만 예산 당국으로서도 여러 사정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고 저희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말씀들이 있어서……

○조지연 위원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30만t 물량에 톤당 최소 18만 1000원에서 최대 22만 4000원까지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 163억에서 최대 202억 원까지 증액이 필요 하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조지연 위원 어제 한 160억 정도 됐나요, 증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 상임위에서 추가 증액안으로 제출한 건 160억입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기획예산처도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농지 특별조사하는 데는 588억 편성하고 정작 무기질비료 예산 지원하는 것에는 42억 원 이렇게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라는 것은 전쟁 추경에 부합하는, 뭐가 우선순위인지가 조금 경도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수부장관님도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해수부장관입니다.

○조지연 위원 어업용 면세유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한시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조금 상한액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할 거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산처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어업용 면세경유는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조지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거다. 그리고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에서 편성해 놓은 추경안을 보면 잘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막 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국세청 체납관리단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그리고 영화 산업 제작지원 그리고 공연·영화 관람료 지원 이런 것 같은 건 과감하게 전액 삭감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운송업자들 그리고 농어민들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혈세를 막 쓰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해도 됩니까?

○조지연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게 지방비랑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지연 위원 8 대 2 그리고 최대는 7 대 3 이렇게 되는데 지방비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보니까 약 1조, 규모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조 3000억.

○조지연 위원 한 1조 3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지방정부와 협의를 잘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40일 정도 됐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잘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협의는 해 왔습니다.

○조지연 위원 협의를 해 왔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3월 31일에 추경 발표하고 난 다음 직후에 바로 화상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직후에……

○조지연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그러면 지방정부의 의견이 무엇이었냐?’라는 저희 의원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17개 시도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 8 대 2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영호남 할 것 없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0%의 부담 때문에 집행을 안 할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 식의 접근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다. 하기 싫으면, 부담 싫으면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한 SNS 글도 봤는데 그것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내려 줘서 지방에는 부담이 덜할 거다, 그런데 초과세입이 되면 결국,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40%를 어쨌든 지방교부세로 내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 겁니다. 그러면 고유목적사업도 할 수 있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재량적으로 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내려 줌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20%는 매칭을 해야 된다, 이것 너무 지방정부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방은 빚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역사랑상품권.....

○**조지연 위원**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천차만별일 텐데 여기에 대해 상향 조정하실 생각 없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작년 추경과 달리 올해는 초과세수로만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40%를 지방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또 지방도 지금 말씀하시는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부분 이번에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이 확인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연 위원** 시도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각 시군구가 내국세의 40%가 이번에 또 재원이 올 것으로 다 예상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치 못한 재원이 확보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중의 일부를—정말 일부입니다—제가 아까 수치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부를 이번에 지방비의 매칭분, 피해지원금의 매칭분으로 쓰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그 얘기를 저희는 끝이끝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 논리에 동의할 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비의 비율을 더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아까 못 드린 것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채납관리단을 별도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세금 안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 풍조를.....

○**조지연 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징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이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이 시점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어떤 쉬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조지연 위원** ‘쉬었음 청년’ 그것 4개월 일자리인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게 중장기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일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지연 위원 어떤 청년이 이런 것 좋아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청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도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말 말 그대로 단기 일자리, 그리고 체납관리단 기사 보도도 보셨지만 청년들 아주 극소수 10%대 채용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주로 청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세수입을 각 부처가 다 흩어져 있는데 2명, 3명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입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국세수입을 징수하던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국세청에다가 맡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전액 삭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고요.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원·장수·임실·순창의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존경하는 진성준 예결위원장님, 동료 선후배 위원님!

또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요동치고 되살아나던 경기 회복의 흐름이 위축될 위기입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구윤철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작년 상반기에 0.3% 성장을 하던 게 하반기에 와서는 회복이 되고 아마 금년에 한 2%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OECD 전망이 1.7%로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 일정 합의 이후에도 선거 추경이니 전쟁 핑계 추경이니 증세 청구서 운운 비난하고 있습니다.

OECD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적시성 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계·기업을 타깃팅하며 에너지 절약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쟁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지요. 이런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는요 그런 정치적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시급한 현실을 저희들은 직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일각에서는 물가 자극 우려가 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나 KDI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은 디플레이, GDP갭이라고 해서 이걸 수요가 촉발되는 게 아니고 공급 부분의 애로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고 KDI나 한국은행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거시·재정·금융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 수장의 3자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정·예산·금융 당국의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데요. 부처 간 거시정

책 공조를 어떻게 강화하고 시나리오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거시경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장관님이나 금융위원장 제가 수시로 만날 예정이고 그 이외에도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고 또 대통령 주재로 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그다음에 총리님 주재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그리고 제가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에서 중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박홍근 장관님,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세수,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해 편성한 건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빗 없는 추경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맞습니다.

○**박희승 위원** 국가경제나 국민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법인세하고 증권거래세 또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초과세수 25.2조하고 기금, 여유재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국채 1조도 저희가 상환하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 다마는 이를 통해서 우리 대외신인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또 국채시장 안정화에도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승 위원** 대통령의 추경 편성 첫 지시가 떨어진 지 19일, 실무 작업 착수로부터 불과 17일 만에 이루어 낸 최단기 추경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했다고 보이 는데요. 추경의 핵심과 기조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본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프고 다쳤는 데 여기다가 보약을 주거나 노후를 생각해서 자산을 축적하자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 겠습니까? 긴급한 처방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가에 대응하는 것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소위 석유 최고가격제와 같은 것입니다. 또는 대중교통 환급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좀 더 피해를 받는 층에게 그다음 에 취약계층에게 3단계로 이번에는 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국회 예결위원장도 전에 하셨고 아마 경험이 많으셔서 잘 처리 하리라 믿습니다.

추경 심사는 정쟁이 아닌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어렵게 되살아난 희망의 불씨가 외부 충격으로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정은경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희승 위원** 지금 5개 실무대응반 중 민생복지반 반장을 맡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진흥원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애로가 접수되고 있을 텐데요 검토 중인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주로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나 상담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의료제품 관련된 수급관리는 별도의 민생복지반에서 식약처하고 관계부처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많이 치솟았습니다.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 된다 그래요. 특히 치료제 투여 등에 사용되는 수액백, 주사기 등 필수의료 소모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총력을 다하고 계시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나프타 원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유통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의료제품 생산·유통, 의료현장의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계신데 상황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수급에 문제가 있는 물품들을 주로 의료단체들을 통해서 이를 모니터링해서 주요 관리 품목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수액제 백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고 주사기나 다른 약포지 그다음에 시럽통 같은 것들을 현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원료 공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정확히 재고 파악도 하고 상황을 공유해서 국민의 불안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여한구 본부장님 계신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박희승 위원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처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품목보다 우선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액제 포장제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약 3개월분 재고를 확보했고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부처들 협의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요. 부처 간 긴밀하게 조정·협의를 통해서 국민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아마, 저도 거기 같이 만났었는데요. 정유업계,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와 사회적 대화기구를 진행하며 물량 확보와 상생 협약을 위해 지금 노력 중입니다. 특히 사후정산, 카드수수료 떠넘기기 등의 관행을 점검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나 가격결정 체계 투명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다시 정은경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물가 부담은 취약계층에 특히 더 가혹합니다. 그렇기에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추경안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로 지원 대상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년에 지급되지 못해 올해 예산으로 매꾼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지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고자 여야가 합의하여 224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에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결위 단계에서도 꼭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도 복지위에서 증액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 인천 색동원 거주 발달장애인의 자립 전환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대기자 해소는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복지위에서 통과된 증액안 그대로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신청주의 한계도 극복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만 일가족 사망 사건이 세 곳에서 잇따라 발생했고 제 지역구인 임실도 포함되어 있어 저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것들은 바로 제도개선에 착수해 주시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범부처로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법적인 보완도 직권신청 관련해서 필요해서 그 부분도 국회에 설명드리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노인 돌봄인력 공급 수요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책만으로 충분하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초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돌봄인력에 대한 확보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양보호사가 한 310만 명 정도 자격증을 보유했는데 70만 명 정도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더 처우 개선하는 부분들,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희승 위원 대책의 하나로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노인돌봄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얻는 시간을 시간 저축은행에 저축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할 때 적절한 봉사시간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었는데요. 세대간 돌봄을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측면도 있고, 국내·해외 사례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외국도 말씀하신 대로 봉사시간 저축은행 같은 걸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케어뱅크라 그래서 노인돌봄에 대한 시간을 저축해서 그걸 본인이 쓸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국에서 한 60여 개 기관에서만 하고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배경훈 부총리님, 양자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일본 등은 지역거점 신기술 연계에 집중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격차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양자기술은 차세대 AI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연산 방식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자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지금 미국과, 선진국과 약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희승 위원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양자 클러스터 기획 연구 예산 5억 원을 증액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집행 계획이 있는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현재 집행해서 진행 중입니다. 15개의 지방정부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양자기술은 방향 설정과 기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이고 쿼텀 클러스터는 몇 곳을 지정할 예정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양자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7월에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 5개의 양자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분야는 결국에는 핵심 기술, 원천 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양자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시키는 양자 융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도메인 전문 기업들, 지역의 기업들과 양자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양자 융합을 통한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승 위원 전북의 경우에도 제조 기반과 실증 인프라가 강점입니다. 제조·실증 환경과 접목할 수 있고 소부장 중심 통신과 센싱 분야 등의 산업 전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지역별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김용석 대광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여기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언제쯤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지방에서 건의한 사업이 많아서 지금 분석 단계고요, 금년 하반기 정도에 수립·고시할 계획입니다.

○박희승 위원 철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렛대 역할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대전남원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

다. 전북 동부권의 불편 해소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사업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희승 위원** 전라선은 지금 상대적 소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라선은 46회, 호남선은 92회, 경부선은 216회로 이용객의 불편이 엄청납니다. 지금 주말에나 평일에나 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래서 어쨌든 편수 증편뿐만 아니라, 지금 전라선은 편수도 적은데 또 일부 편수는 서대전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KTX선은 서대전을 거치지 말게 하고 서대전 부분은 ITX라든지 무궁화호로 돌리게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호남선을 타고 가서 익산에서 연계할 때 연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면 이미 10분 전에 무궁화호가 떠나 버렸고 어떨 때는 가면 1시간 뒤에 무궁화호가 배치돼 있고 그런 것 촘촘히 국민 편의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말씀 주신 대로 교통체계의 효율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남을의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총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시고 정부는 우리 국민분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밤낮없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달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전쟁이 얼마나 더 길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글쎄요, 가급적 단기간 안에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길어야 2~3개월 정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전쟁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가늠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좀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이틀 전이었지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이 비전투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수출 실적 전망 같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일단 이미 OECD 관련해서 그쪽에서 우리 물가와 성장 전망을 그 이전의 성장률이 상당히 급속하게 회복되는 걸로 전망했다가 다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

가가 올라가는 것을 0.4, 0.9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적으로 유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부문의 타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심리적 영향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고 아마 실제 골목이나 시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3월에 소비자물가 2.2% 상승했고요. 석유류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9.9%, 거의 10% 급등했고 아시는 것처럼 차량 2부제나 5부제 같은 부분으로 또 국민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릴 수밖에 없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을 하는 것도 또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 추경안이 진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안에 담긴 정부의 이 메시지, 진심이 국민한테 온전히 전해지려면 지금 야당 쪽에서 우리 추경안을 두고 얘기하는 비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서는 지방선거 대비 대표용 추경이다 이런 날 선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장관님 보시기에 이 추경이 정말 선거용으로 보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만 위원** 장관님,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황정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22년 5월이었지요. 약 4년 전쯤에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5월 13일 당시 윤석열 정부가 초과 세수 53조로 만든 59.4조 원짜리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을 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김용만 위원** 4년 전 그때 온 국민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던 시기였어서 특히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PPT 보시면 당시 정부안에 소상공인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23조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도 야당이었을 때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방선거 딱 한 달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역대급 규모의 추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상을 담당했던 우리 당 원내대표님께서서는 발목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혹시 그 민주당 원내대표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시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김용만 위원** 참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진짜 국민만을 바라보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말씀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를 입은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우 누적됐고 또 가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직접 협상을 하셨던 게 장관님이시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코로나 팬데믹 고통이 이만저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과 국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박함을 알기에 추경이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거지요.

그래서 4년 전 경제 상황을 봐 보면 이렇습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 위기가 있었지요. 지금도 보면 환율이 1500원 돌파, 에너지 물가 폭등,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하고 있고요. 당시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4년 전 소상공인 지원은 민생을 위한 도리라고 했던 분들이 비슷한 위기 상황인데 지금은 때로 행위다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는 이중 잣대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국채 상환액을 줄여서 민생 지원 더 두텁게 하자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물가상승 우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돼서 민생을 강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추경 때마다 나왔습니다. 거의 매번 나왔다고 봐도 되는데.

22년 5월 추경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똑같은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 국무회의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추경 안 할 거냐. 그래도 국민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추경호 기재부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채 발행을 안 하니 물가 영향도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도 4년 전하고 똑같이 국채 발행 없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오히려 국채를 상환한 빚 갚는 추경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제기한 주장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물가 자극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안에서의 의견이 아닌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추가 편성이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서 즉 잠재 GDP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실제 우리 성장률 GDP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빚 없이 편성한 추경이므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연구기관 KDI 그다음에 조세연, 다 똑같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업들을 보면 오히려 물가 방어적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그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만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맞고 민주당이 하면 틀리다라는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지선 끝나면 보유세, 담뱃값, 소

주값 올리고 설탕세를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걷어 갈 것.

이것 아까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이 복지부장관님한테 질문하셨지요? 이것 21년 정책이고 그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방향인 거고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아까 없다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장기 계획이고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만 위원 설탕세에 있어서는 지금 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설탕에 대해서 건강 부담금을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근거 없는 주장, 이런 여론 호도하는 행태 이것 결국은 국민들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안 핵심 내용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김용만 위원 이게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려다 보니까 재정책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유가 급등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겠다, 이게 정책기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김용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원을 받는 대상이 현재는 하위 70%이기 때문에 한 3577만 명 정도로 보고, 소득 상위 30%를 한 158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상위 30%만 보면 약 1583만 명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대통령님께서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당시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셨으니 민주당의 정당정책을 언급하시면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상위 소득자를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연대감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보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미 석유 최고가격제라든가 대중교통 환급 같은 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150%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알다시피 국가데이터처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범위가 중위소득 150%까지입니다. 그 기준을 보통 우리는 서민이라고도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들은 사실은 필수재에 대한 소비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한 재정 여력, 대응 여력이 그만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충격, 경제위기에 취약한 층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용만 위원** 취약계층에 집중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좀 돌아가서……

지금 보면 정부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득 하위 70% 이분들에게 1차·2차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선별에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급이 늦어지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아까 지적을 했고요.

한번 PPT 봐 주시겠어요?

작년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할 때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할 때는 만 17일 정도, 아까 노종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7일 정도가 걸렸고 하위 90%라고 선별했을 때는 무려 64일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2차 지급을 5월 중에 하겠다고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저희가 사전준비 절차에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무회의와 재정집행 회의뿐만 아니라 유관부처와 관련해서 지금 내부 TF를 구성해서 지급절차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행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그렇게 되면 4월이나 5월 중에 가능하실 거라고 지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행정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4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국민 중에서 하위 70%에 대해서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김용만 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 주셨던 취약계층이 더 힘든, 고통의 크기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중동 전쟁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 맞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께서 과거에 갖고 계셨었던 정책의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 연대성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 봤을 때 충분히 확대해서 전 국민 지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위 30%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이번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약 1.8조 원 수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재원이면 아까 국회예정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 3.4조 원 이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책위 쪽에서도, 한정에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에 있어서 순증을 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건데요.

아까 제가 조지연 위원님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화물·택배·택시 운전자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번에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전 국민 지급과 조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셨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더 폭넓은 지원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대감을 훼손시키지도 않으면서 이 중동 전쟁의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취약계층 또 피해 산업과 기업에 더 우선적이고 두텁게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보편적 복지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함께 고려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한은 잉여금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2.5조 이상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후반기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애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의 징수가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다시피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것은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했다는 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립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우리가 버퍼를 좀 두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위기를, 국민들께서 느껴야 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추경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폭넓은 지원과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안 주신 추가적인 영역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식별이 되어 있으니 조금 더 확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소위 심사에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우선 총리님, 대한민국이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상황이다 이 명제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걸 테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 편성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부하고 또 여당이 위기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앰블런스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작 앰블런스 타고 쇼핑 다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짐캐리라고 그러면 옛날에 영화 ‘마스크’에도 나오고 배우 짐 캐리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짐을 캐리(carry)해 주는, 말 그대로 짐을 운반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업체명이기도 해요. 짐캐리라는 업체명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중국인 관광객 짐을 캐리해 주는 짐캐리 서비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저 말씀 제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저게 딱 중국인 관광객으로 국한해서 하는 내용인지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들어서……

○천하람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이게 중국인 관광객 한정인 건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게 2월 말에 있었던 확대관광전략회의에서 나온 부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유럽으로 안 가고 한국을 비롯한 이쪽 인근 지역으로 많이 오니 이 기회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아마 이 민간서비스의 일부, 그러니까 짐당 70원을 보조하는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들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게 짐캐리 서비스를 포함해서 중국인 관광객 예산이 생각보다 규모가 꽤 됩니다.

앞의 PPT 한번 보면요.

환영·환대 및 편의 제고 예산에 48억 1400만 원, 중국시장 홍보 마케팅 예산에 208억 그래서 30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앰블런스 사이렌 울리면서 쇼핑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괜한 게 아닌 게 이 비슷한 예산이 2026년 본예산에도 올라왔었어요. 이게 75억 5000이 올라왔다가 한 40% 정도 삭감이 돼서 46억 5300만 원 정도로, 전년 대비 38% 감액이 된 사업인데 감액이 된 사업을 추경이다 해 가지고, 심사가 오히려 좀 더 짧다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지금 658%, 300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넣어 왔단 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경험 많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을 추경에서 이 정도로 많이 확대하는 것, 자주 있는 일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혼치는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요,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시장의 변화를 아마 고려한 것 아닌가……

○천하람 위원 지난 본예산이 언제 됐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물론 12월 초순, 중순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사이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그 이후에 중동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관광객이 더 많이 진입하는 이런 것을 고려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천하람 위원 장관님, 그사이에 우리가 저 예산을 600% 이상 증액할 정도로, 몇 달 사이에 그 정도로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유가 위기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플런스가 환자를 싣고 다녀야지요. 우리가 애플런스로 쇼핑하고 캐리어 실어 주고 다닐 일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쓸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들 그다음에 택배기사님들, 배달 라이더분들 이런 분들 돕는 데 써야지 300억 넘는 돈을 저렇게 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이렇게 추경에서 하는 것, 시급성 요건에도 안 맞고 예측 불가능성 요건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체위에서도 심지어 삭감의견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장관님께서 아예 이 자리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명확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짐캐리, 짐 배달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회의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문체부에 올린 사업입니다만 문체위 안에서 여야가 감액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거기의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하람 위원** 조금만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다시피 국회 예산심사 절차에 따르면 상임위의 감액의견은……

○**천하람 위원** 의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결위와 그다음에 소위에서 바로 저희가 증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절차상 어렵다는 뜻입니다.

○**천하람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협중이다’ 이렇게 또…… 저 중국인 짐캐리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갖고 협중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다른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번 추경의 성격하고는 안 맞다. 시급성 요건이나 예측 불가능성 요건에는 안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총리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론은 문체위에서 그렇게 논의해서 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첫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화나 관광 쪽이 제일 어려워진다는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관광 예산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배경이 하나 있을 것이고.

12월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아마 그 사이에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를 조금 완화한 것이 존재해서 그때 그 부분으로 인한 단체관광객의 숫자가 늘었을 것인 것이 아마 고려되었을 것이라든가 정황적 배경은 일단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단체관광객 비중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고, 총리님이 말씀하신 여러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동남아에서도 사실 K-컬처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거든

요. 그런데 동남아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거를 타할 수도 없고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로 관광을 하러 왔는데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고 우리에게만 없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굉장히 친한 관광객을 반한 감정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일 거다.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단체관광이 타기팅이었다면 차라리 단체관광 전체를 타깃으로 잡는 게 맞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를 혐중이나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총리님 또 장관님이 어느 정도 잘 정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잘 참고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유가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 차등도 하시고 이런 저런 작업을 하셨는데 총리님, 이번 고유가 사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국민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하면 결국 어떤 직접적 피해…… 직접적 피해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유류를 쓰는 일반이 다 받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러저러한 직간접적 경제 작용을 통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평소에 하층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봅니다.

○천하람 위원 그것도 일반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딱 뽑자면, 직종으로 뽑자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 배달라이더 하시는 분들. 배달라이더 하시는 분보다 사실은 큰 차를 모는 분들일수록 더 피해가 클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화물차 기사님들이 유류비가 한 달에 160만 원 이상 올랐다,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적자다, 난리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사실 중국인 짐캐리 문제뿐만 아니라, TBS 지원금도 이번에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그거 안 하겠다 하셨더라고요, 전 잘하셨다고 보고.

제가 조금 화가 났던 게 이번 추경을 보면서 중국인 짐캐리 예산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체관광으로 전환한다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을 텐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위기상황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정작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관님, 지금 화물차 기사, 택배 운송 기사님들 타기팅한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그 답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류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지금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 70%가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이 해당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천하람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게 일단 화물차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10만 원 아니면 최대 60만 원이지요. 화물차 기름 한 번 넣으면 60만 원 거의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관광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있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늘리는 거 이번에 1만 명 뽑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그 편성 기준에 있어서 원래도 시급성이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는 가뜰이나 전쟁 추경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얘기를 20번 이상 말씀하시면서 ‘위기 대응 추경이다’ 그랬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조금 안이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짐캐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타기팅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기름을 많이 써서 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제일 좋은 방안이 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폐지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장 볼까요?

유류세를 폐지를 해 드리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50%만 해도 1600원대, 만약에 전액 한시 면제한다고 그러면 1200원대로 떨어지고요. 경유도 전액 한시 면제한다고 그러면 1400원대로 떨어집니다. 총리님, 저 대정부질의에서 말씀하신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 이게 유류세 면제, 최고가격제와의 관계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최고가격제를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유류세 면제를 하면서 최고가격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꼭 굳이 따로따로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가 적절하게 믹스되는 것이 저는 사실 최상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제도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가 하는 거는 지금 경제 당국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번에 2차 최고가격제 하면서 많이 올라가는데 일부는 검토하고 유류세 감면 부분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천하람 위원** 그 유류세 감면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70%니까 그걸 줍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넓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 비해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 재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말로 큰 피해를 입는 국민들한테 쓴다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 면제 아니면 더 획기적인 감면을 하는 게 저는 정말로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님…… 이게 생존의 위기를 겪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국민들 너무 많지만 생존의 피해를 겪는 분들한테 저는 꼭 이번 기회에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화물차, 택시, 택배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월 최대입니다마는 1인당 139만 원의 지원이 유가보조금을 통해서 기지원되고 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나 이번에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소하다면 소소한데 이게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게, 저희가 하나 찾아낸 게 있어 가지고……

총리님, 연 30억 매출 넘어가는 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못 쓰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어쨌든 이번에 타이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주유소에서 못 써요. 주유소가 대부분 연 매출이 30억이 넘어가는 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실제로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 쓸 수 있는 가맹 대상 주유소가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만의 문제인가 해서 제가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순천 자료도 봤는데 순천에도 지금 보니까 88개 주유소 중에 사용 가능한 데가 18개, 그러니까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 30억 기준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고수해 왔던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주유소에서는 최소한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총리님 의견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일단 그 전에 아까 유류세 전체를 다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그게 유류를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한 타깃팅 효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 중에 기름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라는 고민이 반영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지금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국민들께서 정작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해서 상품권 받으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을 주유소에서 못 쓴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주유소 갔는데 여기는 되니 안 되니, 어디를 찾아가야 되니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상품권 나눠 드리고 국민들한테 욕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고성의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 정점식입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는 농식품부장관님과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행안부장관님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정점식 위원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의 목적을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추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점식 위원 물론 고유가 피해를 위한 추경인 점도 있지만 또 고유가 피해와 관련 없는 그런 추경 예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은 78억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현재 정부안은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게 너무 적어서 ‘생색내기용 짬물 지원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습니
다.

이번 3월 달,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농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본격적인 영농철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기름값 무서워서 농기계 시동도 못
걸겠다라는 그런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 경영이 거의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점식 위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면세유 경유값이 무
려 20.6%나 폭등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20% 정도 됐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2월 27일 기준으로 1122원에서 3월 13일 1353원까지 올라갔
습니다. 생산비 폭등은 결국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서민 물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지겠지요. 결국 농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강조하는 물가 안정의 가장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이에 대해서 동의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지금 현재는 시설농가의 등유만 반영이 돼
있고요 농기계에 쓰이는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셔서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농협 등 농업인단체들의 유류비 인상 차액의 70%를 지원하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예산 130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건의사항을 많이 들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노
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해수부장관입니다.

○정점식 위원 어민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처참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

입니다.

출어경비 중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3% 정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보조금 대책을 보면 현장 실태를 제대로 알고 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어민들이 쓰는 면세경유 4월 공급가격이 리터당 1381원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정부는 보조금 계산하는 기준인 상한 공급가격을 1234.7원에 묶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정점식 위원 실제 기름값은 1381원을 넘는데 정부 상한은 1234.7원에 멈춰 있으니 그 차액만큼 어민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서 어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보조금 상한액을 현재 115원에서 311원까지 현실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795억 원 정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어업인단체들의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면세 휘발유 어선의 경우 59억 원의 신규 편성도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점식 위원 그리고 장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 통영의 경우에는 섬이 570개 정도 있고 유인도도 41개 정도 있습니다. 이 섬지역 주민들의 소위 교통수단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여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객선은 육상의 버스나 지하철과 다른 없는 필수 대중교통이자 생필품을 나르는 핵심 인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유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객선사들이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렇지 않아도 적자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름값 폭등으로 더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결국 또 하나, 연안화물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자재 등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화물선들인데 이 화물선들에 대한 경유 보조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중유를 사용하는 배들은 아예 지원조차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물류망이 멈춰 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태의 엄중함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안여객선 유가연동보조금 106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638억 원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점식 위원 물론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장 농기계를 멈추고 그리고 출어를 포기해야 되는 농어업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두 분 장관님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정점식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정점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4월 2일 행안부에서 ‘선제적 가뭄관리로 철저히 가뭄 대비한다’라는 내용의 2026년 가뭄종합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 해당 대책을 보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섬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담수화시설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일부 섬 지역의 용수 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내린 결정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가뭄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섬 지역 주민들이 매년 제한 급수 그리고 물 부족을 반복적으로 겪어 오고 있습니다.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에 근본적인 급수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요. 결국은 강수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추경이 중동 사태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안이라는 점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 특히 섬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민생 문제가 아니라 섬 지역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정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그때 4월 2일 날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소위 섬 지역과의 직접 상수도 연결이라든지 지하수저류댐이라든지 그리고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발표하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다른 부처와 협의할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대책 또 재난복구 예산, 예방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 보도자료 중간에 보면 3월 26일 날 가뭄을 겪고 있는 통영 육지도의 재난구호협회와 협업하여 1만 병의 생수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기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인 통영 육지도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직선거리로 한 27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연결해서 식수 공급을 할 수는, 아예 지금 현 단계로서는 거의 불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결국은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자연 의존의, 내리는 빗물에 의존하는 이 단계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장관님 충분히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런 경우에는 해수담수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런 문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풀어 나가야 될 문제지 지방정부에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저희 지역인 옥지도의 경우에는 주변 섬들, 주변의 부속도서들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수댐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한계에 도달을 해서 결국은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정점식 위원** 김성환 장관님, 조금 전에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린 소위 옥지도와 같은 섬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행안부장관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지하저류댐이나 해수담수화시설의 실무 부서는 기후부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기왕에 옥지도에는 지하저류댐 사업이 2023부터 27년까지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지하저류댐 사업이 완성돼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해수담수화시설도 올 4월 달에 설계에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옥지도의 가뭄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월에 해수담수화시설에 관해서 용역 설계 등을 거쳐서 담수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결국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물부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과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정점식 위원** 박홍근 예산처장관님, 조금 전에 제가 두 분 장관님께도 질의드렸습니다만,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지도와 같은 섬지역의 경우에는 결국 식수 대책이 해수담수화, 사실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거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통영시와 경남도에서는 이런 옥지도와 같은 섬지역의 식수 문제,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해수담수화시설 1식 그리고 염지하수, 염분이 포함된 지하수 처리시설 그리고 관로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런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서도 필요예산 14억 이 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증액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장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섬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육지도 같은 경우에는 빗물에 의존하고 있고 그 주변 섬까지 합치면 2000여 명의 주민들께서 매년 여름이라든지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상,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향후 절차를 거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를 함께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성북을 출신의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장관님,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거냐,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심리지수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는 아예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100 이하로 떨어졌던 게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기 진작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 11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3월에 중동 전쟁이 터지니까 한 107까지 또 떨어져서 다시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예를 들면 지방선거 끝나고 다 떨어진 다음에 끌어올리려고 그러게 되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 가능성이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생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 경기 회복의 흐름이 다시 위축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이미 경기가 한참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하게 되면 일단 소비자들도 소비를 다 줄이게 될 거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사업 활동 기반들을 계속 축소하려 그럴 거고 이게 계속 맞물리게 되면 경제 전체가 쪼그라들게 되고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그러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전쟁이 설령 오늘 끝날지라도 소비자심리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비 여력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뿐만 아니라 전망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향후에 종전되더라도 이것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한국은행총재도 그렇고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추경은 제때 해야 된다, 하려면 빨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적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남근 위원** 몇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번 추경에 청년들 일자리 지원, 청년들 창업 지원 또 하다못해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 사회활동들, 취업활동들을 하도록 지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청년들이 제일 타격들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당연히 기업들이 취업의 문을 좁히겠지요. 닫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옳친 데 옳친 격이라고 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청년들이 구직을 시도하다가 좌절하게 되고 또 청년들의 특색이 한 번 좌절을 하게 되게 되면 장기간 구직을 포기하거나 쉬어 버리는 ‘쉬었음 청년’이 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크게 위축되게 되면 고립·은둔 청년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상태로까지 악화된 다음에 그런 청년들을 다시 사회활동이나 구직활동으로 나오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더 많은 재정들이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고립·은둔으로 빠지기 전에 대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점에서도 청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때에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청년들이 일자리 활동에 나서고 사회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도 대부분 다 청년 지원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제가 원내에서 민생부대표를 맡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조업체도 만나고 인쇄업체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세탁소협회도 만나고 여러 중소기업인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상당히 고용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망이 어렵다 생각해서 고용을 다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그분들이 고용을 좀 늘리도록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지금이야말로 고용들을 좀 줄이지 않고 같이 버텨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제도가 지금 적시에 사용돼야 되는 것이지, 다 고용을 줄인 다음에는 별 효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현재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남근 위원** 이와 같이 추경이라는 것들은 제때 해야지 그 효과가 큰 것이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때, 제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번 추경의 중요한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장관님, 이번 추경안에 보게 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공연·영화 이런 문화요금들에 대해서 할인 정책들을 통해서 문화소비들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또 문화산업 종사자인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하고 영화산업 특히 독립영화 이런 데 지원을 해 가지고 그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소비가 줄어드는 게 바로

문화소비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극장 한 번 덜 가게 되고 공연 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가, 성장하는 산업 중의 하나가 이 문화산업인데 문화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생활이 매우 어려운 예술인들이 이번에 치명적으로 생계 위협을 받게 되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K-컬처의 기반이 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일정한 문화소비들이 유지되게 하는 것도 우리 문화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데 중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예술가들 중에는 특히 굉장히 어려우신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이 산업에서 이탈해 가게 되면 그것도 기반을 다시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점에서 이런 때 제때 재정이 투입돼 가지고 이런 문화산업 기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은 내수 소비 진작과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시기에 경기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산업 기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불필요하다, 선거용이다라는 것들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총리님, 재정경제부장관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남근 위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추경 편성하고 재정 투입하는 것들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한국이고 특히 지난번 최고가격제 제안한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평가가 아주 높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김남근 위원 옆에 일본만 보더라도 유가가 높게 올라가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외국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 8000억 엔, 우리로 따지면 한 8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 7조 5600억 이 정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이렇게 쪽 봤더니 다 재정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재정 정책을 쓰지 않고 이게 선거용이니 뭐니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경기가 더 바닥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피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한시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김남근 위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도 경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윤석열 정권이 팔짱행정 하면서 그대로 방치

하는 바람에 우리 경기가 아주 바닥으로 크게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경기라는 게 한 번 꺾이게 되면요,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더 많은 노력이……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제 제때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물가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보통은 경기가 상당히 호황일 때 재정을 풀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어려울 때……

○김남근 위원 그렇지요? 특히 잠재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끌어올려야지 상대적으로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 딱 필요한 특정 계층에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넓게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까 화물자동차나 택배 기사들한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고가격제를 실시를 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경유 가격도 높게 올라가지 않게 되니까 화물자동차 기사나 택배 기사들도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받는 비용적인 압박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담을 좀 낮춰 주는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유가보조금까지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70%까지 하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에도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근 위원 문제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담을 안는 계층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남근 위원 제가 만나 봐도 다, 다 부담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인쇄업계에서도 잉크 가격도 오른다고 그러고 건설 하도급업체에서는 지금 페인트 칠하는 하도급업체에서 페인트 가격도 오른다고 그러고.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이 유가가 오르는 것들을 방지하게 되면 다 부담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유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가격제라든지 또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다양한 정책 그리고 또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 등을 통해서 그 부담을 굉장히 줄여 주는 누층·다층적인 그런 정책을……

○김남근 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이렇게 핀셋처럼 지원하면 된다는 것들은 지금 유가 급등이 우리 산업 전반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이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과하는 안이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층·다층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또 피해가 좀 덜한 일반 국민들은 단층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소비를 왕성하게 해 줘야 되는 중산층들이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소비를 급격하게 줄여 나가게 되면 매출이 많이, 왕창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소비 진작책을 쓸 때는 중산층까지는 그런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서도록 하는 지원 정책, 이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책 같은 건 필요한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상류층보다는 한계소비성향도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김남근 위원 그런데 중산층 플러스 취약계층에도 지원하는데 차등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 대신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특히 인구소멸 지역 같은 지방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서 거기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니까 더 많이 소비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내도록 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또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들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추경은 많은 고민들을 해서 굉장히 복잡적이고 다층적으로 예산 구성들을 짜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경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드러난 이 산업 구조의 문제도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이번 정유산업하고 주유소업체의 사례를 보니까 아주 전근대적인 거래 방식이 남아 있어요. 소위 사후정산제라고 그러지요. 자본시장에,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가격이 확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유업체하고 주유소업체를 보게 되면 가격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한 달 후에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유소업체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 봐야지요. 뒤에 내가 어떻게 정산을 받을지를 모르는데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요즘처럼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공급가격을 크게 올리는 이게 되게 되면, 월말에 정산할 때 공급가격을 크게 올려 놓으면, 소비자한테 판 가격보다 공급가격이 더 높아지면 나는 적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소비자가격을 밀어올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후 정산 방식의 전근대적인 거래 방식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고가격제는 확정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주 단위로 이

렇게 슬라이딩해서 점점 올려 가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는 것인데 나중에 전쟁 이후에 최고가격제가 해소가 되고 그런 다음에도 우리 정유 산업 내에 있어서 이런 거래가격 방식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정산 이런 유통 구조상의 말씀하신 그 이슈는 저희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 관행 그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을지로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남근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고 정유업체하고 주유소업체하고 의견을 좁혀서 사후 정산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 단기간으로 사후 정산제를 하더라도.

그런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정산하는 것하고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한 달, 두 달이면 예측이 굉장히 어렵지요. 처음에 입고가격하고 정상가격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일주일 단위로 하게 되면 그 가격의 차이가 폭이 좁으니까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똑같은 이슈가 석유화학업체하고 플라스틱업체 이런 데도 똑같아요. 가격을 정해 놓고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통지를 하고 나중에 월말 정산을 하는데, 전쟁 전에 톤당 154만 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가. 그런데 갑자기 3월 초에 80만 원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 시작하자마자 50% 이상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국회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정산을 할 때는 다행히 20만 원만 올리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한 15%, 20% 올린 거니까 상당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80만 원 다 받으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 중소기업들이 버텨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3월을 잘 넘기고 났더니 또 4월 달, 4월 1일 되니까 다시 또 60만 원 올리겠다, 그러면 3월하고 합치게 되면 80만 원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후 정산제 방식들이 여러 가지의 공급 안정성을 위축시키고 뒷부분에 자꾸 가격을 전가시키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사후 정산 방식의 전근대적인 거래가격 제도를 개혁하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 충주시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고를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여한구 본부장님, 카타르의 LNG 수입 시설이 이번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이것 복구하는 데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던데 거기서 우리가 LNG 수입하는 게 한 15% 가까이

되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종배 위원 그것 대체해서 수입하는 게 지금 정리됐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에서 들어오는 LNG는 지금 전쟁으로……

○이종배 위원 그래서 아세안인 다른 데로 좀 돌려 났어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대체 도입선을 저희가 계속 중동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하기 위해서……

○이종배 위원 지금 추가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으로 올 때는 또 가격이 비싸지지 않아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환경부장관님의 상임위 답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에너지 수입 같은 것은 여기서 하고 또 전기 발전하고 그런 발전에 쓰는 것은 또 이쪽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연결을 시켜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처장관님, 어쨌든 이번 추경이 석유 수입에 차질이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전쟁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종배 위원 국민들의 그 피해를 보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지요? 그런데 추경 요건하고는 잘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가재정법 89조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기재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추경 요건은 아니다. 그런데 역대 보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게 꼭 보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89조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이종배 위원 글썄, 그렇게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 그러는데 명확히 보면 맞지 않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예정처나 예결위에서도 요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종배 위원 명확히 보면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과세수도, 90조에 보면 초과세수가 예상될 때는 예상되는 초과세수 수입은 국채에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초과세수 중에서 국채 상환은 이번 추경예산에는 없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의 경우는 다르게 처리를 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채 상환을 저희가 1조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1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앞으로도 초과세수 있을 때는 국채 상환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채 너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이런 부담을 줄여 줘야지 될 책무가 있다 하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정부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또 적극재정을 통한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총리님 어디 가셨네요. 이따 오시면 여쭙기로 하고 예산처장관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 대책 예산인데 사실 그거보다도 현금 살포성 예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의 취지나 목적과 다른 세출예산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복지예산 같은 것, 에너지바우처라든지 놓어민 면세유, 비료 구매 지원 대책 이런 것은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구요. 거기에 피해지원금, 우리 국민들 70%에게 주는 피해지원금이 4.8조지요, 4조 8000억?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3580만 명,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약……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10만 원에서 60만 원 지급하는데 저는 이렇게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국민들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빨리 달라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예산편성하고, 또 지급도 다음 달에는 지급이 되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번 달에 됩니까, 이번 달?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빠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그런 취약계층은 이번 달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이종배 위원 이번 달부터 다음 달?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나머지 하위 70% 국민들은 다음 달까지 이렇게 준비되는 대로 할 겁니다.

○이종배 위원 이번 달부터 다음 달, 결국 선거 한 달 전에 다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글썄요.

지난 2022년도 그때 원내대표 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때는 제가 예결위원장 하고 그럴 때 이때는 그러면 지급은 선거 후로 하자 해서 그때 22년도 6월 1일 날 선거였었는데 5월 29일 날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급은 선거 이후에 지급을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때는 국회에서 처리한 시점과 선거의 기간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어쨌든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전에 이렇게 지급을 하면……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국민들은 좋아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표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하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제가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게 선거와 무관하다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 목적 자체가 빨리 대응할수록 그만큼 후과가 적다는 측면, 시급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굳이 돈 풀어서 지방선거용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에서 갖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 표라도 더 얻어야지요. 선거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한두 번 해 보신 것도 아니고, 선거라는 게. 선거 여러 번 해 보셨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우리 국민들 지조 높습니다. 이것 10만 원에서 60만 원 받는다고 표심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국민들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종배 위원**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해야 되고 또 야당의 존재의 가치가 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전선거라고 해서 그전에 장관들이 선거 앞두고서 지방에 다니는 것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10만 원에서 60만 원씩 준다, 재정지원을 한다, 이런 것은 명백하게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표추경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잘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계속할게요.

이 사업들 보니까 앞에서도 뭐 여러 분 지적하셨지만 국세청 체납관리단 이 문제도 그래요. 당초 예산에 500명 요구했다가 무슨 체납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서 9500명을 늘렸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게 2133억입니다.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도 195억인데 이것은 없던 사업을 만든 건데 이것도 유가 인상, 에너지 위기하고는 무관하고 특별히 또 뭐 ‘사회연대경제’ 이래 놓으니까 이념적인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거 같잖아요. 이걸 또 우리 당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 외에 농지특별조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총동원해서 다 조사했어요. 이것을 또 5000명을 새로이 일자리 준다고 해서 조사단을 또 구성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인데 이런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앞으로 일 자리를 얻는 데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 뭐 답변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답변하셔도 뭐 뻔한 답변일 테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단체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 또래의 청년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계속 취업을 미루고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기업이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경험을 짧게라도 하는 것이 동기 부여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이런 데다 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것도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 추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총리님, 대정부질문도 고생하시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총리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번 추경은 석유 문제거든요. 이번 추경은 석유 수입 가격 오르고 석유 수입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 이런 건데 이게 석유 사용을 좀 줄이자 이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석유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종배 위원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면 너무 이렇게 건너뛰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석유 공급 자체가 사실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종배 위원 사실 직접 관계는 없고요. 우리가 수입한 원유가 50%는 차량 이동하는데 차량 연료로 쓰고요, 그리고 50%는 나프타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생에너지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던데 발전설비 지원이라든지 햇빛소득마을 확산, 베란다 태양광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이것은 이번 추경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거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삭감을 주장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총리님, 당초 예산이 728조,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배 위원 8.1% 증가했는데 이번에 26.2조, 가뜰이나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 상승의 우려가 되는데 이 유동성 확대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환율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OECD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0.4% 낮춰 가지고 1.7%로 낮춰 났고요. AMRO에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45% 올려서 2.3%로 해 났어요. 이게 결국 연결시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26.2조가 풀어진다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영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종배 위원 아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려가 상당히 된다는 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추경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종배 위원 그러면 저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종배 위원 우리가 좀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정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안정도 마찬가지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추경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하고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행안부장관님, 이번에 보통교부세 느는 게 한 4.5조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전체 9.7조 중에서 교부금 빼면 4.5조 정도 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4.6조 가까이 됩니다.

○이종배 위원 이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자율 운용 재원이예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거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2023년도인데 멕시코·미국 방문한 거 보니까 칸쿤 일정은 전혀 불필요한 일정입니다. 보고서도 그렇고 증빙서류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지방재정 낭비하는 건 명백한 부당한 재정 집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지방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추경 심사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이종배 위원 추경이지요. 이게 지방재정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감독권이 있어요, 지도·감독권도 있고, 감사권도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불법인 경우에 한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잘못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재정 잘못되면 재정진단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재정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행안부에서 요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재정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또 디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런 것 잘못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자료 요구하고 해 봤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항상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체크하고 체크한 결과를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동구남구을의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민주화의 성지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확고한 대반등 국면에 진입했었습니다.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니까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했습니다. 트리플 강세를 보인 거지요. 이게 통계로 입증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반가운 지표는 투자입니다. 투자가 전년 대비 11.5% 급증했거든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힘차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함께 수출도 금년 들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 갔고 중동 전쟁 와중에 3월 달 수치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860억 불, 사상 최고로 800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지수,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급상승하면서 2월 26일 날 6300선까지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명예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낙인을 이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전쟁 와중에서도 우리 코스피는 5000선을 굳건히 지켜 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듯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저력을 보이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처럼 경제가 반등 국면에 들어섰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직전까지요. 그리고 그 반등의 계기가 계엄 등등을 포함한 지난 정부의 후반부에 계속되던 하강으로부터 계엄을 국민의 탄핵으로 이겨 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반등이 시작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비교적 주요했고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서 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큰 반등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유능한 정부가 만들어 낸 정책 효과다, 국가 CEO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개선의 흐름, 그 내용, 질을 볼 때 이건 단순한 경기 반등을 넘어서 투자와 수출이 선순환되는 그야말로 건강한 성장 구조 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등 경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라는 외생적 변수가 우리 경제를 지금 사정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원자재, 원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외환시장도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한 달 사이에 40bp 정도 넘게 상승했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 선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의 복합위기를 방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가상승과 성장 둔화가 병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일부에서는 그 초입 단계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도 어제 일부 특히 야당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빠질 수도 있다가 제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물가가 2.2%거든요, 1월·2월 2%로 굉장히 안정됐는데, 벌써 석유류 가격이 9.9%,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지요.

그리고 장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가 있지요, 소비자심리지수 그리고 기업심리지수가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15개월 만에 가장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고 있는데요, OECD가 중간 정도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가상승률은 0.9%p 그리고 성장률은 0.4%p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발 빠르게 이러한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감한 선제적 정책 대응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 19일 만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마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밤샘을 해서 추경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6.2조 하면, 이게 제대로 투입이 된다면 금년 경제성장률은 한 0.26%p 정도 우리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OECD가 예상한 금년도 성장 하락분 0.4%p의 한 절반 정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코……

추경으로 모든 경기회복을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최소한의 이 규모를 가지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민간 투자, 민간 소비 그리고 수출 촉진 같은 전방위적인 경기회복 조치가 병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물가를 상승시킬 거다, 물가를 자극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성장률이 현재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수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갭이 있는 거지요.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더욱이나 이번에는 재원이 초과세수 아니겠습니까? 경기회복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민간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면 통화량이 늘게 되는데 이번에 통화량 증가도 없게 되는 거지요. 또 재정수지도 이번에 국채 상환을 1조, 상환을 좀 늘리기 때문에 이것이 악화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추경을 통한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러 들어가 있는 사업을 보면 직접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있지요.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 필요한 손실 보상 그리고 원자재 수입에 따른 물류비 증가 요인을 일부 완충시켜 주는 것 또 그리고 나프타 등 원료 수입 상승분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물가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직간접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가지고 돈 풀기 추경이다, 그리고 재정 포폴리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예로 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 규모는 1인당 10만~60만 원입니다.

보니까요, 가구당 월평균 에너지 지출 비용이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어요. 이 지출 증가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3만

7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당 있잖아요, 가구당 가구원 수가 2.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구당 지원금으로 환산하면 수도권·비수도권 해 가지고 20만~3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 돈은 결국에는 유류비가 올라간 분의 한 6개월 정도를 보전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퍼주기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또 산업 현장의 수에 비해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내용을 보니까 위기 극복에 필요한 산업계, 서민층의 요구에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보면 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산자부장관님 계시지요?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동안 나프타 가격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차입분의 절반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 인센티브를 가지고 제삼국에서 나프타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좀 있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인상해 달라, 지원 폭을 좀 늘려 달라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나프타는 산업의 쌀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회와 또 업계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산단, 우리나라 최고의 산단이 여수에 있지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석화산단의 가동률이 지금 한 60%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안도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감소가 아주 심각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만 해도 25%가 줄었더라고요. 비상용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협력업체 연쇄부실 또 지역상권 위축이 되고 또 지방세수 감소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휘청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을 했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안도결 위원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강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을 시켜서 지원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부에서는 특히 전기요금 지원하는 부분을 추경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도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굉장히 의의가 큰 일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이번 7월 1일 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필요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금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님께서 특별하게 배려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 성격에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도결 위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여하튼 이번 7월 1일 날 제대로 출범하려고 한다면 행정 인프라가 깔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희가 시스템 통합부터 모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전남광주의 지방채 발행을 보증하는 형태로 일단 지원안은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도결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6일 날 작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내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저는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을 조금 발견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변화된 내용들이 이번 통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작년도 추경과 비교해서 결산이 어떻게 됐느냐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결 위원 봤을 때 초과세수 있잖아요.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일부 발생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1조 8000억……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경기회복과 세수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추경 대비 1.8조 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재정수지도 추경 대비 개선이 됐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거기는 7조 4000억이 줄었습니다.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자산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는 게 바로 국민연금의 적립금,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지켜 주는 자산이 크게 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결 위원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주된 요인이 바로 운용수익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운용수익만 보니 232조예요. 232조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최근 3년간에 우리 국민들이 낸 매년 연금보험료가 61조입니다. 이것의 4배에 달하는 큰 수익을 한 해에 올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또 수익률 개선은 결국에는 우리 기금 고갈 연도를 연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률 1%만 높이면 되는데 작년에 수익률이 18.8%였지요? 이걸 반영하면 누적 수익률이 6.8에서 8.0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p가 올라가는 거지요. 1%에 한 5년 기금 고갈 연도가 늘더라고요. 그러면 1.2%면 6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자산을 잘 운용해서 6년 정도 기금 고갈 연도를 늦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이유가 뭘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 가지고 경기가 반등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가 얻어지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도……

○안도걸 위원 예,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금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가채무비율도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상 49.1%라고 했는데 49%로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WGBI 있잖아요. 4월 1일 편입되면서 외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도 인하시키고 또 환율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부총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 실무자들이 자금을 담당하는 일본계 은행들 직접 접촉도 했고요, 홍콩·싱가포르 IR까지 다니고 또 저도 일본 재무장관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일본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WGBI 자금 한 35억 불이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여하튼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재정부 직원들께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고 또 자본시장에 대한, 채권시장에 대한 꾸준한 개혁 의지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과 정책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진성준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만찬 정회 전까지 휴식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특히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 답변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들을 미리 예고하고 지정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성남중원 출신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 경기도 성남중원구 돌봄 정치인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국토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산자부와 농림부까지 질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 이번 추경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 주춤해질 위기를 극복하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용 추경이라고만 비난합니다.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5월 기억하시지요? 62.4조에 달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4일 후인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 추경을 놓고 윤석열 정권의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난한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원내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이수진 위원** 예, 제가 원내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권이 바뀌면 정치인의 말의 책임도 가벼워지는지 의구심이 드는 추경 질의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민생은 없고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추경을 들어 ‘중국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태양광 사업을 언급했는데 정부 지원 태양광 사업은 저탄소 모듈 등급 기준이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결국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패널은 저탄소 검증을 받은 국산 제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 추경이라고 비난합니다. 또 관광객 유치 확대 예산도 중국 추경이라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니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채발행 없는 이번 추경이지만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추경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

하면 민간자금의 단순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변한다, 제한적이다 이게 한은의 의견입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세금 납부해야 될 사람들에서 이제는 정부를 통해서 이전지출 대상으로 단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M2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수진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최근에 식품 대기업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설탕·밀가루 가격을 5% 내리게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가에만 출시되는 여성 생리용품 문제를 지적하자 시장에 100원 생리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생활물가를 줄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물가대응적 사업들이 많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밤새워 편성한 이 추경, 국회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예산 부처 수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약 0.2%p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언제 처리되느냐,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위례삼동선 그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난 3월 10일에 위례신사선과 관련된 부분이 예타 결과가, 위례삼동선도 위례신사선 연장선으로서 최근 예타 결과가 확정됐지요, 지난번 말씀하신 위례신사선 부분이. 그래서 이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돼야 한다는 데 저희들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경제성·정책성을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 사업은 이미 18년 동안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6월 달 내로 빠른 예타 결과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년공으로 일했던 그 공장이 있는 성남 상대원동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반 산업단지인 성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성남 중원은—1971년이지요—광주대단지 사건, 즉 성남민권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집도 상하수도도 도로도 제대로 없는 곳에 국가 정책으로 판잣집, 천막촌으로 시작된 주거지역입니다. 이제는 교통복지 강화 등 국가가 제대로 된 생활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피지컬 AI와 푸드테크산업 중심의 성남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 예타 심사에 있어서 위례 행복주택 사업, 광주 직동지구 개발 등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적인 택지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또 일자리 효과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여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현행 예비타당성 수행 지침에 따라서 일자리, 생활여건, 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성남시 철도기금 3000억 원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제반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타 심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이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8호선 연장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여수2·금토2 지구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비해서 사업비를 500억 원이나 감액을 했고 또 노선 주변에 27개 개발 계획이 있어서 교통 수요도 24% 증가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원 조달 능력과 의지도 충분합니다.

장관님,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예비타당성 심사에 정책성 평가와 지자체 예산 부담 의지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한 달 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조사에 착수하고요. 알다시피 보통은 선정된 이후에 한두 달 정도의, 통상 연구진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종합평가 등의 절차까지 저희가 이 타당성을 검토할 텐데요. 말씀 주신 부분까지 감안하여 저희가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긴 했어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차질 문제,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일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민생회복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나프타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와 같은 석유 화학 원료가 필요한 제품 생산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포장재나 아니면 주사기 같은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같이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식약처·산업부와 같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 유통구조, 유통단계에서 사재기가 되지 않게끔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관련 예산은 복지부 예산은 아니고 산업자원부, 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일부는 아마 보험수가로 보전할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나프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들은 산업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처 간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일선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긴급복지 그리고 또 장애인 지원 등 차별 없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 추경에 담긴 복지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촘촘하게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반값게도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이용촉진 예산 확대입니다.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고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수진 위원 우리는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또 대중교통체계 강화라는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강화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예산 증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 국토부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여기에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 ‘모두의 카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단순히 예산 국가 지원뿐만이 아니고 출퇴근유연제라든가 또 재택근무라든가 또 다양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이 발단이 됐고 좀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교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상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해외 사례 연구 등 대중교통정책 근본 전환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 신속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용역발주 준비 등 그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사전 행정절차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수진 위원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중첩해서 진행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이 예타가 통과된다면 올해 내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속한 행정 준비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사업 주체가 경기도하고 성남 또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계획, 기본계획이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성남 중원에 방문하셔서 수광선 도촌야탑역 신설 필요성을 직접 점검해 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수진 위원 감사드립니다.

도촌·야탑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서 교통인프라가 매우 부실한 대중교통 사각지대입니다. 향후 야탑밸리 산업단지도 조성 예정이고요 또 이에 따른 교통 수요도 확대될 것입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을 고려해 기본계획의 노선이 실시설계에서도 변경이 됐습니다. 성남시도 도촌역 신설 예산의 원인자부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실시설계를 변경해 장래역 신설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공사라도 해 놔야 추후 예상되는 역 신설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광선 도촌야탑 장래역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제가 그때 현장 방문할 때 참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는 걸 제 눈으로 봤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공장은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최소 5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공장이 그렇습니다. 성남 중원의 경우 시멘트공장에서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택가, 상가뿐 아니라 주민센터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에는 시멘트 분진 누출로 인근 지역이 하얗게 뒤덮인 일도 있습니다. 8월예요, 눈도 아니고.

장관님, 주민 건강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50m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최소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제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수진 위원 성남 산단에 있는 이 시멘트공장 처음에는 주택가와 좀 떨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도시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50m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시멘트 업종을 성남 산단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공장 시설이겠지요.

저는 산업단지 내의 부적합 업종에 10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이전을 강제하되 또 이를 위해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건강, 주거환경보호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집적법에 환경 피해가 있는 주거밀집지역 인근 공장의 이전을 권고한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특정 시한을 뒤서 공장 이전을 강제하는 부분은 기업 재산권 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 위원 지역 안에서 사회적 협의도 충분히 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산자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조배숙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은 행안부장관님 그리고 또 부총리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농림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조배숙 위원 최근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칸쿤 출장이 외유성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년도 3월 10일부터 10박 12일간 진행된 이 출장이 멕시코와 미국 오스틴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과연 칸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될 장소였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떡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동행했던 안동시 연수단 일정표를 보면, 이렇게 죽 나옵니다. 3월 7일에는 메리다에서 유적도시 치첸 이트사 그리고 3월 8일 칸쿤 해변, 엘 메코 고고학 유적지, 마야박물관 등 방문했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게 어느 분의……

○조배숙 위원 행안부장관님한테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러니까 국외출장 일정을……

○조배숙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막지 마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한국 연수

단 평가 회의'라고 기재했습니다. 고의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절차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동행한 여성 직원을 서류상 남성으로 허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해외 여행 가기 전에 심사기구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기록 조작 의혹입니다. 23년도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성동구청이 공개한 문서에는 심사위원 5명 이름만 있을 뿐 서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재섭 의원실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없던 서명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위조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변명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출석할 때 자기는 반드시 의결서에 서명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공개된 문서에는 서명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건 뭔가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서명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그러면 회의 자체가 열렸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또 칸쿤 등 휴양지에서 먹고 자고 했을 텐데 그 2박 3일간의 숙박료와 식대에 대한 영수증조차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분이 같이 갔다 어쨌다 얘기를 하는데 여럿이 같이 갔으면 공식 일정이라면 최소한 공식 사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했어요.

그다음 넘겨 주세요.

동행한 여직원 A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분이 시민단체인 어떤 단체 위원장 지냈는데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행을 했어요.

당시 A씨는 지방임기제 다급이었는데 이후에 나급을 거쳐서 가급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직책은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재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고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개경쟁 공모가 없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반직공무원이 다급에서 국장급인 가급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13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4년 만에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이분이 성동구청의 실세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장 서류에는 여성임에도 남성으로 허위 기재하고 회의 주재하고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도 성동구청 직원 중 A씨만 콕 찍어서 단들이 갔고 현지 일정도 외유성 관광이라 보기 다분하고 여행 다녀온 이후부터 초고속 승진까지 했다. 장관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게 추경 어느 대목과 연관이 있습니까?

○조배숙 위원 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그리고요 자꾸 추경 어느 대목과 관련이 있냐 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분이 서울시장후보로 나왔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부금은 서울시에 단 1원도 교부되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야당 시절에 현안질의 안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방재정교부금은 서울시에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다음 띄워 주세요.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88조, 190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위법사항을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정황이 드러났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지시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조배숙 위원 여기 제가……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된다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읽으셨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불법이 아닌 한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법령에 위반된 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보세요. 추경과 무엇이 관련이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정부가 사실 이런 외유성 여행,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인데 공적 일을 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범죄 정황을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강을 잡을 능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 큰 국가예산을 다루는데 과연 여당이, 정부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의혹과 논란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서울시장후보 또 전재수 부산시장후보 이렇게 후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 저지른 잘못된 사법 절차대로 처리해서 후보직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관영 전북도지사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질문이십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가 터지고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제명했고 이제는 집무실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정원오 전 구청장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넘어가려는 것인지? 김관영 지사는 친명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비명횡사입니까?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은 친명이라서 봐주는 것입니까? 아무튼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경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 안 들으십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요,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배숙 위원 장관님, 추경은 원래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예외적인 추경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의례적으로 상시화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심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또 2차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예산처장관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재정이 나빠질 것이 뻔한데 돈 쓸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중동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만큼 저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꼭 써야 될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세수 25조 원이 있어서 빚 없는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90조에 보면 세계잉여금 처리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이거는 지금 세계잉여금이 아니고요 초과세수를 전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조배숙 위원 초과세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괜찮은 게 아니고요. 세계잉여금은 저렇게 딱 규정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저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동안에 모든 정부가 초과세수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전망에 따라서 해 온, 그런 추경을 편성해 왔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편셋 추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니깐 지난해 본예산 때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이때다 하고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에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25억 원 감액했어요. 그게 관리단 500명 채용하겠다는 것을 400명으로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500명 선발하겠다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추가해서 7000명 더 뽑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있던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 한다면 또 형편 어려운 체납자 다그쳐서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추경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 때 감액된 사업이 끼어들어 온 게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끼워 넣기 민원성 사업으로 저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비리 사업이라고 적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은 과거부터 보조금 비리 등으로 해서 논란이 반복이 돼 왔어요. 그래서 23년도 6월 12일에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전직 간부, 자치단체장 등 13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요청을 했고요. 그 이외에 민간업체 대표, 직원 등 25명이 수사 참고 사항으로 송부해서 38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으로 2205억 추가했지요?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623억 8000 했지요? 그다음에 가정용 미니 태양광 지원을 250억 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장관님,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보조금 수령 후에 3년 이내에 폐업한 업체가 몇 곳인지 또 업체들이 받아간 보조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번에는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도 저희 기후부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그걸 지방정부가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소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기후부가 직접 그 사업을 잘 챙겨서 위원님 걱정 없도록 잘……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사업이 보조금만 챙기고 폐업하고 나서 명의만 바꿔서 사업에 다시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재생에너지 사업 중국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기후에너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재생에너지 사업할 때 가급적 국산으로 사용 유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태양광 밸류체인이 거의 다, 우리 국내 업체가 다 소멸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것 왜 그랬는지 혹시 위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제가 덩핑이지요. 덩핑이고, 저희 지역에도 넥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파산했거든요, 그 경쟁력이 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산업이 아니라 중국만을 배불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 문제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포장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주장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제가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배숙 위원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태양광 관련해서는 정말로 아쉬움이 큼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원전도 하시더라도 재생에너지도 좀 집중 육성을 하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우리가 셀과 모듈이 거의 40~60% 정도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직 원전만 하시고 재생에너지는 거의 탄압하다시피 하시는 바람에 당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이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큼니다. 그런데요……

○조배숙 위원 글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시장의 태양광 산업은 사실 거의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우 체력이 약화됐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태양광 기업이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셀과 모듈을 지원해 줘야만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중국에 맞서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가급적 국내에 지원하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설치업체에 대한 부실성 문제도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프타 파동 때문에 소위 나프타 신재에 대한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종량제 봉투는 일종의 재생플라스틱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업체에 대한 설비를 좀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이번 정부 예산안에 담지 못해서 이번에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종량제 봉투 설치 업체에 재생원료를 쓸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일정하게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를 좀 잘해 주셔서 종량제 봉투를 재생원료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포장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농림부장관님한테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조배숙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추경 기억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최기상 위원 그때 예결위 간사도 하셨고 나중에 예결위원장도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지적들이나 아쉬운 점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점들이 그때 지적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무래도 그때도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그 사업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냐 이런 게 늘 쟁점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최기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 보니까 ‘사각지대 보완 되나’, ‘법인·개인택시 지원금 문제’, ‘특고·프리랜서 지원 문제’ 등이 논란이 됐었던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 중에는 ‘농어민 유류보조금 관련 부분, 어업인 상한선 설정, 농기계용 제외’ 이런 부분,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추경을 올해 서른 번째 넘게 하고 있는 거지요, 98년 이래만 하더라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서른한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부 내에 정확히 갖춰져 있는 것인지, 우리 장관께서는 코로나 추경 때는 국회에 계셨고 관련 일을 하셨다고 보여져서 이번에 가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정부가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보이셨어요?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갖춰져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혹시 발생을 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주로 주장했던 물류·운송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 더 보강하자라든가 또 농어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류 관련된 부분 지원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기준이나 전례가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이지요.

○최기상 위원 보시기에, 정부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정부 부처에서 국회에서 보지 못한 부분까지 준비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번 추경도 짧은 준비 기간에 비해서 정말 밤잠을 거의 못 자면서 이미 언론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담당 사무관·과장·서기관들은 3명이나 코피를 쏟고 며칠 전에 또 1명은 이명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꼼꼼하게 그것을 또 워단에서 계속 지금 내부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번에 정부를 거쳐 이렇게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냥드림 사업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기상 위원 그냥드림 사업 관련해서 아래에 이 표를 보시면 그동안의 시범사업 실적, 이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상담(재방문) 그다음에는 상담연계의뢰, 더 나아가 복지서비스 연계 이렇게 분류가 죽 되고 있더라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냥드림은 국민들이, 먹거리를 걱정하시는 분에게 긴급하게 먹거리를 1차 방문 때는 지원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 방문할 때부터는 복지 수요가 있는지 기본 상담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3차 방문할 때는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연계해서 구체적인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심층상담을 해서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인데요. 하나는 긴급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두 번째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최기상 위원 최초의 시범사업이 언제쯤 시작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과거에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쯤 최초로 시작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경기도에서 코로나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중의 하나는 위기가구 발굴 그리고 공공복지체계 유입기능이 유의미하게 현재 수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하는 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분들이 이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은 저희가 푸드뱅크시스템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담인력,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전문인력 인건비를 좀 추가로 증액을 해 주셔서요, 그 부분이 반영되면 좀 더 전문상담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올해 말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추경이 반영되면 시군구당 하나 이상에서 한 300개소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기상 위원 중간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 자체의 민간 후원에 일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후원을 받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중앙에서도 민간 후원을 같이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에서 3년간 10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도 이런 민간 후원 부분을 연계를 같이 하고 있고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

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 간의 격차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기본적인 제공은 예산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를 들면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에 그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활동하는 단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는 부분이 쉽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초단위로도 하지만 광역이나 중앙 차원에서도 후원을 매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역 간의 격차를 좀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민간 후원 부분에 대한 배분 부분을 원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원하는 물품의 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 물품이라 하여서 질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되는 먹거리 관련한 부분이나 다른 생활용품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한 점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한 번 방문할 때 2만 원 상당의 필수물품을 제공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음식이나 건강한 물건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금액 대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좀 더 고민하고 지침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햇반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요.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품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 후원 부분과도 연결된 문제인데요. 민간 후원을 받다 보면 그 질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을 못 쓸 가능성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기상 위원** 지금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양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저희 지역에 가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았더니 의외로 김치나 반찬에 국산이 아닌 음식을 제공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이거라도 얼마나 고맙냐라는 생각 때문에 항의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바로 구청과 구의회랑 협의해서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중식과 김치를 국산으로 못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급식이 이렇게 나왔다면 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어르신들이 이런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과연 알고나 있었을까라는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기상 위원** 그리고 먹거리 외에도 필수생활물품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먹거리 위주고요, 지자체마다 품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현재 푸드뱅크나 이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품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전에 물가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프랑스 사례도 가령 샴푸나 비누, 치약, 칫솔 같은 부분들은 제공을 했다고 보여지고 이 사업 내용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기상 위원 제가 2016년에 본 영화인데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복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미 영국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가장 필요한…… 거기에서는 여성 위생용품이 없어요. 그것을 못 구하니까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 사업에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대상한테 주어질 수 있는지, 특히 청소년들 관련해서 요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보는데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주로 그냥드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실은 60대 이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연령층에 맞는 필수품목을 저희가 잘 구성하도록 하겠고요.

여성용품인 경우에는 성평등부가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부처와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한 내용 같습니다.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생태계 구축 부분이 더 보완이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다음 보면,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때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설명도 하셨고요. 국민 누구나 폭넓게 참여하고 손쉽게 신청하고 성장과 실패 이후에 재도전도 지원한다는 매우 좋은 취지입니다.

다음 보면, 그런데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창업자의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창업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뒤에 숨어 있는 이 부분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창업 영역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많이 신청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이번에 모두의 창업을 설계하면서도 느꼈던 것들이 창업가들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모두의 창업에 평

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실패하거나 했을 때에 저희가 재도전의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도전 관련된 부분에 금전적 지원 관련된 부분만 있었는데 재도전했던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일단 문서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거를 일단 설계를 했고요.

지금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아예 폐업을 하면 우울감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기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더 저희도 세심하게 좀 더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기상 위원** 민주주의는 차이를 다루는 역량에서 그 성패가 좌우되고 시장은 실패를 다루는 역량에서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그중에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나온 분석이니까 이번 추경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께 혹시 부탁드리거나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총리께서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다양하게 꼼꼼히 살피고 계신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함께해 주시면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또 같이 품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께서 그 부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우선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를 믿고 여러 가지를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실천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품목의 어떤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짜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동요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기 때일수록 함께하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경험도 있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성준**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의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총리님, 기획예산처장관님, 재정경제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아주 오랜만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문화강국의 꿈, 지금 K-문화는 세계사에 기록될 변화를 만들어 내면서 대한민국 전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큰물에서 고기 좀 잡아 보려고 했더니 먼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배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구멍을 막으면서 동시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을 굶길 수가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버티고 한편으로는 벌어야 하는데 그물마저 모자랍니다. 그물이 충분히 있어야지 고기를 많이 잡고 재료를 사야 배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불안한 국민들은 버티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실을 예상해서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의미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재원 위원 머지않은 미래에 진짜 경제적 타격이 온다고들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국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국가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K-문화와 문화 파생상품에 대한 니즈는 넘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화예산은 정부 총지출 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문화기술 R&D 예산 역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총리님, 정부는 K-컬처 300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산업은 단순히 그 산업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문화, 외교, 기술과 통상 그리고 플랫폼 산업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가 나는 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부는 수출, 외교부는 외교, 과기부는 기술 이렇게 쪼개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날 리가 없지요. 공무원들만 힘듭니다. 이 상태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기가 넘쳐 난들 어떻게 잡겠습니까?

총리님, 우리 문화 열기가 언제 꺼질지 몰라요. K-문화의 인기를 연장하고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문화통상전략회의체를 즉시 출범하십시오. 문체부장관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참석자로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한 문화산업을 수출, 외교, 기술을 통합하여 관장할 범정부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과 각국의 정책을 감안한 긴밀한 논의하에 전략을 세우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기술 R&D 대형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십시오. AI 콘텐츠, 가상현실 제작, 저작권 및 플랫폼 기술 등 이미 글로벌 경쟁은 기술 중심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주도권은 해외로 넘어갑니다.

셋째, K-브랜드 해외 인프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성과가 입증된 K-브랜드 해외홍보관, 이른바 코리아 360을 수출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순방을 계속 다니시고 있는데 순방하신 국가 중심으로 전략적 설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문화는 결국 상징과 영향력으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황석영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작가회의 개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 질서를 주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한강 작가를 비롯한 우리 문학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노벨상에 준하는 한국형 문학상 신설 등

문화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구멍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물을 새로 만들고 한 번에 더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문화유산은 최하위로 두고 기금으로만 버티게 하고 구조 투자는 하지 않는다면 K-컬처 300조,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쭙겠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범정부 문화통상 전략체계 구축과 문화기술 R&D 확대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있습니다. 이미 관광 관련해서도 종래보다 훨씬 범위를 넓게 해서 회의체를 만들고 있고 문체부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관련된 것을 말씀처럼 이제는 과거와 달리 경제사나 외교 등등을 포괄하는, 장관회의를 포함해서 각종 회의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현재의 1%대 초반은 너무 참 문화국가를 얘기하기에 난감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해서 최소 저희 정부 임기 내에 일단 두 배는 가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라든가 일반적인 문화선진국의 수준에서 2%대 중반 정도로 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장관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정부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것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은 저희 정부에서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영을 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 모두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체부장관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바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입니다. 국제정세 불안, 감염병,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사태가 발생하면 행사가 즉시 취소됩니다. 관광객도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고정 수입이 없는 해당 분야 종사자들은 증빙서류를 마련할 수도 없으니 대출도 안 되고 당장 이번 달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하는데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고의 절벽에 내몰리게 됩니다.

창피하지만 이것은 바로 제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일입니다. 실제로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서거, 천안함 피격, 세월호 참사와 팬데믹, 히트곡이 여러 곡 있는 저조차도 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다가 한계에 다달았을 때 어머니가 쌈짓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악학원을 차려서 그 절망의 시기를 넘기고 행사도 서서히 다시 생기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의 시기였는데 버텼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가 하신 일은 잠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용돈을 잠깐 주신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어서 그 시기를 버티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저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제 어머니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일로써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고 구조를 짜 주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은 타 산업과 다른 생태계 루틴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분야의 진흥기금들은 이들 분야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입니다. 기금이 탄탄하면 창작, 투자, 산업 확장으로 이어지는 루틴에 문화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이 만들어지지만 기금이 무너지면 이들의 생태계 자체가 붕괴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재원을 대부분 다른 분야에 투입하고 문화예산은 문체부의 자체 기금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금으로 편성한 약 1조 원 중에 절반 이상인 5158억 원이 문화 부문입니다. 일반예산은 685억 원에 불과합니다. 부처 중 최하위급입니다. 내용 역시 장사가 잘되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투자라기보다 단기 집행 중심입니다.

총리님, 해도 너무합니다. 체육기금·문예기금·영화기금을 털어서 버티기용 예산편성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 예술 무너집니다. 결국 K-문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지금 국가적 사태가 났으니 땅을 파먹으면서라도 버티되 작품은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서야 K 300조·500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그토록 예술인기본소득을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추경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화 분야를 언급하셨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가뜩이나 문예기금은 고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 부문 지원 예산을 체육기금에서 당겨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인들은 체육인들대로 전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예기금 고갈이 국가 문화산업 기반 붕괴의 원인으로 이어진다는 점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 부문 지원에 일반예산 편성이 안 될 거라면 문예기금의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체육기금과 문예기금의 현재 구조 상태 그다음에 또 이번 같은 추경 때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술복권이라도 발행해서 기금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이 예술복권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배분을 타 분야와 형평성을 맞춰서 법정 배분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님, 재정경제부장관님께도 묻겠습니다.

문예기금을 일회성 사업 재원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으로 보고 재원 안정화 대책 마련에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문화 분야의 예산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갈수록 확장해야 된다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현재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법률적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는 제약이 많고 나머지 기금에서 쓰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 더구나 체육기금에서 쓰는 걸 문제 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 말씀을 충분히 들어 왔고요.

다만 알다시피, 이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옛날에 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면서 결국은 자체 수입이 확 감소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타 기금에서 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왔습니다. 복권 수익에서 공익 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677억 원, 영화발전기금에 44억 원을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문화나 영화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현재도 문예기금 전입금에 보면 체육이 한 1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갖다 쓰는 것을 문체부 등하고 상의해서 준비를 한 것인데 이리다 보니까 체육계 안에서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는 반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목적에 체육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시라. 그러면 저희도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금의 전입이나 전출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여유 재원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체육기금에서 전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앞으로의 산업이 더 확장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예기금은 고갈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총리님, 뜬금없는 질문 드릴까요? 우리 정부의 통일 기조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우선 현재의 갈등 구조와 또는 북한 핵으로 인한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일차적으로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고 그런 기조를 탄탄하게 밀고 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기초까지 쌓아 가는 것입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같은 사태에 우리가 여러 자원이 모자랐는데 그동안에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이제는 우리 정부의 통일 기조대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했던 단순 구조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제 우리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대해서 북측에서 긍정적 화답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류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부 담화 중에서 기대적 요소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아무 노력도 못 하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접교류보다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인식 확산이나 제삼국 기반 교류 그리고 주변국과의 문화·학술·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국제적 통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통일 환경 조성이라는 원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직접적 교류는 현실적으로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부에도 있고 국회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도 보고 또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더 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 교류 활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꾸 끌어 나올 수 있게요.

기획예산처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김재원 위원 이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투자로서 목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 동의하시는지 또 제도적·재정적 제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 부분 관련해서는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 표명도 있었고요.

남북협력기금을 왜 설치했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적의 변경이나 제도의 개선이 전제된다면 가능할 텐데 현재 기금의 설치 목적이 분명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원 위원 목적 변경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남북협력기금이 그렇게 묶혀져 있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식 전환을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추경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대정부질문 답변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이 없었으면 추경도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전쟁 없었으면 추경은 없었을 것이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전쟁 추경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지금 위낙 상황이 나빠지니까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야당 위원으로서도 수긍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응급조치의 성격인 것이지요? 맞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재원이 얼마나? 20조가 넘는 돈. 저희 야당이 반드시 물어볼 것, 돈 어디서 날 거냐? 역시 빚내지 않아서 할 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서 초과세수 25조가 확실하게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가불 예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뒤에 앉아 계신 윤호중 장관님 그때 비대위원장이셨는데—기사에 의하면 아직 확정도 안 된 돈을 쓰는 가불 추경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작년 그 직전 연도 법인세는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어느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25년 법인세 확정 아직 안 됐지요,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것은 재정부……

○조정훈 위원 재정부장관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3월……

○조정훈 위원 3월 말에 다 하니까 아직 정확한 법인세 확정도 안 됐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확정 신고는 해 가지고 아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아직 모르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확한 숫자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가불 추경이라고 저도 똑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을 전쟁 추경, 가불 추경이라고 했을 때…… 총리님, 저는 세세한 세부 사업은 저도 예결위 소위에 들어갈 거니까 그때 논하고 이걸 종합정책질의니까 큰 방향에서 저는 도저히 이것은 수긍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기본소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얘기는 빼더라도 저는 두 가지가 진짜 눈에 밟힙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지원금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신 겁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총리님, 수도권에 사는 게 죄는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당연합니다.

○조정훈 위원 서울 산다고 나쁜 놈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취지로 수도권, 비수도권에……

○**조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권에 2차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 하위 70%에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까지 가면 25만 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번 추경에 녹아 있습니다. 즉 경제적 상황은 똑같지만 지방에 살면 더 준다, 또 다른 말로 서울과 수도권에 살면 조금 주겠다,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아이 키우면 아동수당을 받는 데 있어서도 조금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수도권 청년은 못 받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방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은 좀 큰 기술로, 큰 정책으로 움직이는 문제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추경이고 가불 추경이고 긴급지원금인데 솔직히 생활비 측면에서, 물가적 측면에서 가장 비싼 생활고를 겪는 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분들에게는 철저하게 모든 사업에 있어서 거의 돈을 갈라치기를 하셨는지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뒤에 교육부장관님도 앉아 계신데 추경에는 없었습니다만 교육정책에서 아주 좋은 법안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다른 아님, 대학생들 졸업하고 학자금대출 한 것 이자 갚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밝히는 게 뭐냐, 이 대상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만 면제해 주자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 그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는 같은 경제적 조건에 있어도 쏘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드는 겁니까?’. 8만 원입니다. 이자 감면이 8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8만원법’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 8만 원 때문에 서울·수도권 대학 가려고 한 사람이 지방 대학 갈 거다? 믿지 않으시지요? 그런 것은 좀 과한 가정이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왕 줄 바에 저희 보수당도 동의하겠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은 차별화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서울·수도권과 지역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서울·수도권까지 다 주면 얼마 더 들어갑니까?’ 38억 더 들어간답니다, 38억.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인 교육위 상임위원장도 웬만하면 다 주자고 하시더라고요. 38억으로, 한 달 8만 원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방이 더 육성될 거다? 이것은 저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효과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국무총리 김민석**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려도……

○**조정훈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우선 전체를 왜 이것을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설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수도권을 차별하거나 갈라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표현하는 전혀 다른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그렇게 보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으로 가능한 선상에서 기본을 하고 그리고 여건이 더 어려운, 아까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나 누리는 환경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또 수도권과 지방 간에 있어서……

○**조정훈 위원**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정책 2개가 부딪치는 겁니다. 제가 총리님한테 설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방금……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은 전쟁 추경이고 가불 추경이고 임시방편이고 고유가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편셋 지원하는 거다. 그 정책 목표로라면 가장 고통을 받는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 육성 정책과 섞어 버리다 보니까 이런 차별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더 하실 말씀은, 총리님 시간 있으시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번째는 몇몇 분이 얘기했는데 체납관리단입니다. 저는 국세청장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 봤고요. 큰 틀에서 이해가 됩니다. 가성비 높은 거고 세금 안 내는 것 나쁜 거지요. 도덕적 해이지요. 그래서 특히 악성, 생계형이 아닌 악성 체납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뭐와 섞었냐 하면 청년 일자리 정책과 섞으셨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 나오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전전 정부에서는 대학교 교실에 불 켜 있으면 꺼라, 그래서 일자리 주겠다 이것은 저는 이것에 비하면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한테 지금 내민 게, 지금 고용24에 접속하고 혜택알리미 누르면 이것 제안하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남의 집 들어가서 세금 낼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 와라. 체납관리단 이게 과연 청년들이 우리 사회 첫 일자리로, 사회 경험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관련해서 두 번째는 무슨 게 있냐 하면 농지 특별조사입니다. 밭에서 자라고 있는 게 고추인지 감자인지도 모르는 청년들한테 실제 경작 여부 관리하라고 합니다, 확인하라고.

땡벌에서 930만 필지 청년들이 돌아다녀 가지고 이것 경작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실내에 앉아서, 컴퓨터 앉아서 시정 공문 씁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 사회 경험 시킨다고 해주는 일자리가 이게 맞습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 세금 낼 수 있는지 찾아봐라, 알아봐라. 제가 말을 거칠게 하면요 이것은 흥위병이에요. 그리고 헛터고요.

이런 일자리는 저는…… 저는 이게 2000억이고 9000명이고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세청 전 공무원들, 사회 경험 좀 있는 분들이 더 낫지 20대 청년들한테 훈련시켜 가지고 남의 집 가서 세금 낼 능력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 다 좋지만 제가 아주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아까 있었던 지방 우대 정책을 갈라치기라고 하거나 또는 지금 세금 체납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을 홍위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체납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이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도하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이 일을 만든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전후가 전도된 것이고 또 표현의 과장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나 그것을 또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그 또한 좀 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걱정하게 정책의 취지를 설정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더 유념하겠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표현을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국무총리 김민석** 이 시점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건 아니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안 사용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저는 모든 두 가지 정책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서 적절한 청년 일자리의 종류에 과연 국세체납단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것은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적 그리고 미래세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는 것은 야당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국세청장입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니깐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조정훈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부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교육 카르텔이 난리가 난 게 있습니다. 장관님은 잘 아실 텐데 작년 6월 달에 감사원에서 소위 학원강사들하고 교사들하고 사교육 카르텔이요. 그래서 수능시험 문제를 서로 거래한 그런 정말 악질 범죄를 감사원이 밝혀 냈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사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기사에 의하면 ‘일타 강사 현우진 그다음에 일타강사 조정식’, 어쩌면 몇몇 장관님들, 대부분의 의원님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훨씬 더 우리 학생들한테 유명한 겁니다. 이런 일타강사들이 현직 교사에게 몇억 원씩을 전달하고 문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감사원이 밝혀 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조정훈 위원** 이거는 일벌백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작년 2월 감사원 보고서였고요.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이 조정식 변호인단 관련된

분이 나와서 첫 재판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이 언제부터 거래가 됐습니까? 이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표 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총리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재산 공개된 국공립대 총장, 부총장 중에 사교육 보유 주식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사교육 업체의, 이름만 들어 보면 아시는 그런 업체의 사외이사 명단 한번 보십시오. 과기부장관,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총장, 교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걸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저게 지금 현 장관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날짜 연도를 보시면 22년도 있고요. 14년도 있고.

○국무총리 김민석 그러면 2006년 당시에 현 장관이 그랬다는 건가요?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전직이겠지요, 당연히. 현 장관이 저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 개정도 좀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교육부장관님을 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감사원이 배석하지 않아서 제가 감사원에는 요청을 못 하지만 저희가 또는 시민단체들은 이미 공개된, 재산 등록과 공개의무가 있는 국립대 총장과 부총장만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불길한 예감은요 총리님, 이것만이 아닐 것 같은 제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립대 총장도, 사립대 관계자분들도 다 한번 사교육 관련된 상장주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사교육 업체 입시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입시공정 하나로 버텨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의 개념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카르텔을 이뤄서 시험문제를 몇 억씩 주고받고 지금 249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8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고요. 저도 더 적극적으로 보면서 교육부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척결하는 방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현직 교사들, 공교육에 있는, 사교육은 이제 감사원과 수사하고…… 이걸로 카르텔, 학원강사들하고 문항 거래하다가 걸린 249명의 교직원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이 작년 2월, 1년이 넘었는데……

○**교육부장관 최교진**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사안은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결과를 보고 엄정하게 조치할 생각이고.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냥 계속 수업 참관하고 학생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 기피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각 교육청별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징계 현황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국세청장입니다.

○**조정훈 위원** 예, 한 말씀……

○**국세청장 임광현** 아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들에게 혹시 조금 뭔가 이렇게 험한 일을 시킬까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00명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삼십 대가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별로 맞춤형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20대는 주로 현장보다는 전화라든지 그리고 악의적인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보다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들에게 복지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로 이런 역할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만나서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세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청장님, 이것 지원율 굉장히 높은 사업이지요? 청년들 일자리 아니어도 사람 구하고 남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이번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조정훈 위원** 500명 지원하는데 9000명인가 지원했다면서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거의 17 대 1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첫 일자리로 이런 것 주지 마세요. 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저희가 볼 때 일자리라기보다는요, 이 청년들이 지금 쉬었음 청년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면담을 해 보니까 일자리…… 취업하기 전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진성준**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이 다음 질의하실 김한규 위원님 그리고 이강일 위원님까지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시을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순서대로 총리님, 행안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에게 4월부터 6월까지 월 3만 원씩페이백을 해 준다고 하고요. 경남도지사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328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전 도민에게요?

○김한규 위원 예, 저는 의미 있는 정책이고 현재 상황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총리님께서서는 두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한규 위원 이번 추경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들어 있는데요. 만약에 가장 낮은 금액인 10만 원을 받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여당 후보 뽑아 줄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우리 국민들이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선거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 물어봐야 되는데 총리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들의 경우에 도청에서 주는 10만 원하고 정부에서 주는 10만 원 둘 다 받으면 누구를 뽑게 될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글썄요. 우리 도민 또는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은 그런 사항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선거용 금품 살포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안을 편성한 우리 정부와 또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으려면 70%가 아니라 전 국민을 주는 게 맞는데 그런 전제라면 잘못된 예산인 것 같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총리님, 혹시 미국에서 코로나 때 준 경기부양 수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보여 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부양 수표를 보시면 맨 밑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대통령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이름을 딱 기재했지요. 미국은 이렇게 대통령 이름을 명기한 방식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총리님, 우리나라에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데 혹시 받는 분들한테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원까지는 빼더라도 대통령 이재명이 준다는 게 어디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굳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것을 정부 예산편성안이기 때문에 정부한테 고마워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부 예산안 결정하는 것은 국회 아닙니까?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기도 하고, 이번 추경 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원망스러운 것이지만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을 타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무의미한 논쟁은 매번 지원금을 줄 때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적절한가, 이게 잘 설계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행안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과 또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서민층에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서민층이 석유를 더 쓰는 것도 아닌데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아니, 서민층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어쩌면 유류를 많이 쓰는 분들은 중산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대비 유류 지출의 비율·비중이 에너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5분위 배율로 보면 1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20%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2분위·3분위·4분위보다 2배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소득 대비했을 때. 그래서 사실 기초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 30%의 경우에는 소득 대비 비율도 좀 적고 그다음에 에너지 충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봐서 70%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것은 경제학개론, 원론도 아니고 개론 시간에 배우는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접세하고 똑같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필수소비재 지출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소득 수준이 낮은 또 소득 대비 필수소비재 지출이 많은 서민층의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 차등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장관님 얼마 전에 4·3 즈음에서 제주4·3평화공원에 방문하시느라고 제주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제주에서 혹시 지하철 타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없지요? 제주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기차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사실상 비수도권의 경우에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부족합니다.

○**김한규 위원** 드라마를 보면 다 지하철을 타니까 다들 집 주변에 지하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도권 빼고는 대전·대구·광주·부산밖에 없고 일부 지역은 딱 한 호선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못 합니다.

제가 서울 강남병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압도적인 차이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선거운동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는데 강남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강남구에 지하철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10개가 넘을 겁니다.

○**김한규 위원** 36개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까?

○**김한규 위원** 송파구에 30개,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그 지하철역은 강남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강남에 출근하는 분들이 이용할 뿐이어서 저는 코로나 시절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권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지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엄청 잘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선도 확충하고 지하철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하지만 지하철을 아예 탈 수 없는 지역 지방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은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리고 횡수도 매우 적습니다.

자가용을 탑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걸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자가용을 타는 이유는 그걸 타야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에 있는 분들과 지방을 갈라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지방에 살아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사람들, 조금만 걸어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런 배부른 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금 잘 설계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전쟁으로 인한 유가 피해가 더 커진다면,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지방 분들을 위해서 제2의 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경제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국민의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아니,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화물, 택배, 택시운전사나 푸드트럭 등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지원은 외면하고 이렇게 피해하고 무관한 사람들에게 현금 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화물자동차 이런 데 있지요, 그건 현재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 향상도 하고 계신 거고. 이것 외에도 더 고민 중인 유가 인하 대책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유가연동보조금 관련해서는 현재 전세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도 공익적 성격이 적다는 이유로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토부에서는,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재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세버스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또 가능하면 건설기계에서 쓰고 있는, 일부 경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가능한 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한규 위원** 추경에서 논의가 잘돼야 되고 만약에 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국토위가 사실 처리가 잘 안 되는 상임위지 않습니까, 법안이? 그래서 저희 국회가 하반기가 되거나 그러면 국토부가 말씀하시는 사업들 최대한 잘 추진해서 유가 인하 대책을 위한 지원도 잘하겠더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잠깐만요.

그리고 이번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공히, 전세버스 등 이런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

중기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최근 모두의 창업 발대식에서 장관님께서 깔끔한 후드티를 입고 나오셔서 갖고 제가 부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말로 밤티 같은 거라는 게 있는데 좀 촌스럽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정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하거나 그러면 약간 밤티 같은 경우들이 많은데 장관님이 입으셔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고 되게 세련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지 브랜딩이나 웹사이트 그리고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수십만이 봐 갖고 드물게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 이번에 155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는데 도대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사실 지금까지 정부 사업이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창업 사업이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그 심사기준이 무엇이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 많으셔서, 이번 과정은 저희가 네 단계 라운드를 통해서 과정마다 경쟁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단계의 100명에게는 창업자금을 통한 오디션까지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멘토들이 직접 창업가들을 보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업 이전에 준비를 위한 준비 과정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서비스를 좀 더 오픈해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으로 정부 사업 중에 아마 아래한글 파일이 아닌 그냥 웹상에서 바로 접속해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1차 프로젝트는 기존 정부 예산으로 하고 계시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2차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1차 프로젝트가 지금 한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선발 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산 통과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오늘 12일 만에,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요 한 5400명 정도 지원했고 그리고 아직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지금 6000~7000명이 있는 상태라 현재 상태로 한 1만 1000명 정도가 잠재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기한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5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김한규 위원**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지원 못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나중에 저희가 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이것이 이번 설계 속의 다른 부분입니다. 예전의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떨어지면 내년에 가야 했는데 이번에는 재도전할 수 있는 설계들이, 아마 이번 추경이 진행되고 나면 바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혹시 음악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보신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제가 좋아합니다. 그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최근에 시즌 12가 끝났는데요 제가 1회도 빠지지 않고 다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1등만 대접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열두 번의 시즌을 보면서 과거에 1차에서 탈락했던 분이 최근에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한 번 떨어졌다고 재능이 없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지원하고 멘토링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아했는데요.

저는 모두의 창업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더 이상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입상을 못 하지만 2차 3차 기회가 열리면 이재명 정부 내에서 아니면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중기부가 진행하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는 실패한 사람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꼭 창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재도전 관련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재도전을 지금까지의 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재도전했을 때 이게 경력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어떻게 시스템화시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그동안 정부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창업가들을 저희가 요청했을 때 500명을 모았는데 한 일주일, 2주 만에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창업가들의 참여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그리고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좀 더 두텁게 만들어 가야 창업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가능하면 저 하얀색 후드티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상당구의 이강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청주시상당구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몇 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이 격변하는 것을 다시 보면서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불법적인 쿠데타도 났고요. 그다음에 지구촌의 경찰국가라고 얘기하던 미국이 사실은 약간 막돼먹게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 남의 나라 지도자도 체포해 가기도 하고, 참 세상이 아직은 그렇게 완벽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족이었고요.

총리님하고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재정부장관님한테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상황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환율 문제인데 1500원을 넘으니까 이 물가가 그대로 국민경제를 때리고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세 가지인데 환율 그다음에 물가 그리고 에너지 구조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환율 상황 먼저 보지요.

장관님, 지금 환율 상황이 솔직히 굉장히 무겁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에 벌써 1500원을 일단 돌파했구요. 하루에도 10원 넘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이게 좀 많이 고착되고 있다. 고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외환 하루 거래량이 21조까지 찍는 정도로 굉장히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라든가 경제계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인 변동을 넘어서 레벨이 아예 한두 단계 상승하는 이런 단계가 지속화돼서 아예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 환율 상승 1500원대가 일시적인 수준일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선이 돼서 이것을 바닥으로 인식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이 환율 레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이 환율 수준이 중동 전쟁 발발 이전에 좀 안정화되다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저는 이게 충격을 많이 받는다. 왜 많이 받느냐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한국 경제가 중동 오일에 디펜딩하는,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오래간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조금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동 전쟁이 빨리 이렇게 정리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RIA라든지 그다음에 WGBI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자금이 계속 한국 경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또 MSCI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일 위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4200억 불……

○이강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동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조금 더 많아졌다. 일시적으로 좀 많이 폭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지금 달러 수요를 촉발하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오른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방어에 외환보유액 40억 달러 정도를 쓴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좀 어둡고…… 이거 문제가 없겠지요? 이거 국민들도 좀 알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오늘 삼성반도체가 분기별로 57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달러가,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너무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의 어떤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최대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요. 지금 상황은 다 공유가 됐으니깐요.

전쟁이 길어지면 성장이 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초기 단계에 벌써 진입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경제나…… 제가 또 실물경제, 자본시장을 주로 다루는 그런 의원이다 보니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심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 위기감 속에서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부의 하반기 경제 시나리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유가 100달러를 돌파해서 이런 수준이 유지될 때 그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준비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조금만 좀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가장 하는 게 국민연금에서 뉴프레임워크 그레가지고,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정부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어떤 주식시장에 편입되는 거라든지 또는 해외에 투자했다가 돌아오는 복귀계좌도 거의 10만 개가 넘어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 거기 에다가 정부가 또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또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많은 수익이 났을 때 거기에 다시 외화자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본 위원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니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감사합니다.

○이강일 위원 물가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총리님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역시 물가가 더 중요하지요. 환율이 결국 물가로 이렇게 슬슬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문제하고 겹치면서 에너지 물가지수가 지금 142를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인데요. 경유가 한 17% 그다음에 휘발유가 한 8% 지금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공업제품, 여기다가 식품까지 쌀값, 고깃값 예외 없이 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전부 생활비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환율이 물가로 번지는 그런 흐름을 아주 적절하게 지금 다방면으로 잘 차단하고 있다,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물가TF 즉시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류세도 인하하고 유류 가격 안정 조치도 하고 가격 지원도 하고 공급망 대응까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제대로 잘 대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도감 있는 대응이 이전 정부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또 김민석 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걸음만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인하, 각종 지원금 정책, 이게 실제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는 어느 수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수치적인 분석이라든가 계산 이런 부분은 경제 당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런 억제 효과도 있고 특히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 반영되어 있는 억제 효과의 계산은 아마 현시점에서는 확인이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

○**이강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억누르는 게 그렇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로를 차단하는 쪽으로 세세하게 정책이 펼쳐야지만 이게 지속성을 갖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에너지 문제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근본에, 근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뿌리로 가게 되면 에너지 공급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고 그 중동 70% 중에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공급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취약성을 드러낸 겁니다. 공급망 다변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 두 트랙이 에너지 전략이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공급망 대책 이외에 추경에 에너지 전환도 800억 반영한다고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강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삼국을 통한 우회 수입,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목표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조금 전에 총리님께 질문하셨던, 만약에 그대로 내려줬다면 석유류 가격이 9.9%가 올라갔을 겁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정부가 최고가격제 설정을 통해 가지고 2월 달에는 2.2% 정도 관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적적으로 갔을 때는 언젠가는 돌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예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 중동에서 수입하는 게 비용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평상시에 저희들은 에너지 고효율, 수요를 좀 효율화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강일 위원** 장관님, 그것처럼 저렴해서 산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 최적화 시켜서 우리의 정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위기에 조금 더 큰 충격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그 정도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산업 대전환 이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총리님, 지금 우리가 평시 상황 아닙니다. 사실은 비상 전시 상황입니다.

OECD가 경고를 보냈습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1.8%에서 2.7%까지 어마어마하게 뛰었고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1%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성장의 늪이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으로, 위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더 뒤에 하자는 그런 주장에 있어서 정말 이게 이유도 굉장히 구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생에 정쟁을 끼워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상당히 간절합니다. 작년 10월에 소상공인 체감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가 전쟁 직후에 수직해서 하락 중입니다. 수출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위험지수가 2001년 아프간 침공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진짜 민생 현장이 심정지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빗 갚는 데 우선이 아니라 이번 추경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선거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불이 났을 때 물값이 아깝다고 물을 쓰지 않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은 가계부와 다릅니다. 지금 사실은 쓰러지기 전에 적절하게 인공호흡도 하고 그들을 되살려 내야지만 경제가 계속 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경제가 탄탄해지는 건데요. 이 기초체력이 지금 무너질 와해 위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기를 방치해서 죽어 버리면 세수 수입이 증가하나요? 응급조치 해서 살릴 것을 이제 중환자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추경이 소모성 추경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민생 파탄을 막는

것이 미래에 크게 지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이번 정부가 민생 구급차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님, 이 의견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희도 이번에 갑자기 생긴 돌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위기 대응 태세로 전환한 것이 그래도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일 위원** 민생에 전세버스 부분의 기사, 택시 노동자, 택배 노동자, 배달 라이더, 사실 유류비 증액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민생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조금 촘촘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세버스 지원 그다음에 KPS 단가 인하,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했던 5대 증액 사항에 대해서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생 구급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의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충분히 논의해서 그걸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도 9.7조 원 증액돼서 추경 매칭 부담금 1.3조 원 제외하고 실제 지방재정 여력이 8.4조 원 증액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 추경에서 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교육재정 해서 9.5조입니다.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금이 지자체에서도 승수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지역 및 단위까지, 민생 현장에까지 직접 살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도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산자부장관님이 안 나오셨는데 여한구 본부장님이 계시는군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강일 위원** 중동 전쟁이 오늘 39일째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원유하고 나프타 이것 계속 국회에서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 빨간 불입니다.

지난 3월 20일 유조선이 들어온 게 마지막이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강일 위원** 이제 수급 절벽 상태로 갑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산 사고 있지 않나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미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데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유시설 때문에 우리가 미국 제품을 계속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돼 있는 정유사의 그런 정제설비가 있기 때문에 다변화하면서, 이런 설비를 그런 다변화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강일 위원** 거기에는 시설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공급망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업계에서 그런 다변화를 위한 설비 개선 지원하는 데,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중동산 중질유와 유사한 유종이 있지요, 근처에?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이강일 위원** 러시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동지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입 부분이라든가 대체재 확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사안이 있나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러시아도 사실 우리 업계와,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왔는데 우리 업계 입장은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에는 품질이나 보험 확보 이런 것들이 1개월 내, 단기간 내에는 어려워 가지고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 그렇게 쉬운 상태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이강일 위원** 이번에 중동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우리가 다변화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인상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것은 회의를 다 거쳐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제가격 상승률, 국민 부담 그리고 또 수요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강일 위원**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정부는 추경으로 나프타 수입 차액 50% 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 예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 이상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업계 상황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하면서 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차액 지원이 사실은 물량 확보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즉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따져 보아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고통 분담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가 나서서 중재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이미 시간이 다 간 관계로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살피시고 돌파하는 데 장관님들 다 같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본관 1층에 있는 제2식당에 우리 위원님들을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저녁 일정이 없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용해 주시고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도 저녁 식사 하실 곳이 없으시면 1층 식당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성·예산의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은 호소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충남 홍성·예산에 내포신도시가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지요. 10년 넘게 전에 10만 목표 도시로 건설을 시작해서 지금 5만 가까이 인구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5만 가까이 된 신도시고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여건 중에서도 학교하고 병원을 가장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지요. 여기에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제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부터 이런 사업이 진행돼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정부와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과 상당히 엇박자를 내면서 가고 있어서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부처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드립니다.

장관님—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작년 예결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1월 6일인데요,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연구용역이 지금 정부에서 다 완결돼 있는데 왜 이것을

공개 안 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면 저렇게 일정에 따라서 작년 8월에 9억짜리 예산이 사실상 종결이 되어서 인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남 등 3개 시도에서 영재학교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영재학교 신설이나, 기존 과학고등을 전환하느냐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정부도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용역 결과 공개를 지금 안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더니, 실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이 용역에서는 기존 과학고등을 영재학교…… 영재학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추진했던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학교로 하는 부분이 전환하는 데 따른 투자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또 여러 가지 부처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전환에 따른 비용이 훨씬 크다, 그래서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타당성 용역을 저렇게 완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 저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있어서 제가 작년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아까 말한 내포에 과학영재학교가 필요하니 이 설립을 위한 용역, 정부가 타당성 용역도 다 해 놓고 발표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신설 용역을 좀 해 달라, 설립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작년에 다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받아 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작년 12월 1일에서 2일 사이 저희하고 기재부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용역비로 3억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작년에 홍성·예산의 의정보고서도 다 이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민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도 몰랐는데 이게 책자 작업을 할 때 둔갑을 합니다. 뭐로 둔갑을 하나면 지금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영재학교 전환 용역 사업으로,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방안 연구라고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고,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희 의원실이 바보같이 당한 거거나 아니면 기재부나 과기부가 마지막 계수조정 해서 서로 합의를 해 놓고 책자 작업을 할 때 저희를 속인 겁니다. 둘 중에, 우리가 명칭하게 당한 거거나 아니면 속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까마득히 모르고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의정보고서에 저렇게 영재학교를 신설하기로 용역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번 둔갑을 합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번 예산, 저 사업의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려고 담당 과기부 등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예산 사업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과학고의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전환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과학창의재단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창의재단에다 이게 뭘 전환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기존의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저희가 지난 9억 예산에서 만들었던,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것을 언제 과기부에서 전환으로 바뀌서, 그렇게 전환 용역으로 바뀌서 했는데 실제 창의재단에서 말

하기를 뭐라고 하나면 이것은 R&D 예산으로 받은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용역 관리를, 용역이 아니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둔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 연구용역을 받을 때 가짜로 연구계획서에도 썼다는 겁니다. 두 번의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작년에 예산심의 해서 통과됐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던 충남혁신도시 영재학교 신설 예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관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거 속은 건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기획예산처가 없었기 때문에 장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소관 부처로서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당시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의 설립 기획으로……

○**강승규 위원** 설립 용역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결위 소위 차원까지는 그렇게 요구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의결할 때는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 방안 연구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어 있고……

○**강승규 위원** 장관님, 구분해서 제가 아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구두로 확인할 때는 당시 예산실의 직원이 의원실에 가서도 이것은 전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저희한테…… 지금 그래서 제가 PPT까지 보여줬고 12월 1일, 2일 날 저희한테 갖고 온 시트를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저렇게. 저 시트를 저희가 복사해 온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설립……

○**강승규 위원** 설립 용역입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 영재학교 설립 용역으로 저게 기재부 담당 과장이 저희한테 이렇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설립이라고 하는 게 신설도 있고 전환도 설립 아닙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데 설립이잖아요. 설립인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설립은 신설도 있고 전환도 있다니까요. 그것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전환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도 얘기했잖아요. 과기부에서 처음 추진했던 9억짜리 예산에 전환보다 신설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다양한 투자비용 등에서 타당하다라고 9억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위원님, 기존에 충북과 광주는 예타를 면제해서, 그래서 신축하는 것으로 충북과 광주는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고요. 그 외 지역은 이게 기본적 방향이었습니다. 계획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신축하지 않고 기존 과학고를 전환하거나 또는 AI 특화고를 개편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그 전, 25년 11월 달에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침이 있는데, 예타 면제도 아니었고, 그것을 전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최종 책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면 저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왔다 갔다,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왔다 갔다 한 것은 다 그냥 가짜였습니까? 설립에는 전환과 신설이 있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고 그걸 구두로 ‘이것은 전환을 얘기하는 설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종 책자에 이렇게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은 최종 본회의에 통과되는……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당했다는 거네요, 그걸 모르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저것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왜 전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자료를 저희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당시 예타 면제된 것과 그 전에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니까요.

○강승규 위원 저희하고 협의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기재부에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가져온 시트가 다 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도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강승규 위원 예, 그게 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설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충남 영재학교 설립 용역에 그게 전환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설립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신설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예타 면제 2개만 해당되는 거고……

○강승규 위원 자, 과기부 부설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나머지는 전환이나 이거라고 아까 제가…… 그 전에 발표된 계획상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이걸 전환을 의미하고 전환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 설명 들은 적 없고요, 그런 설명 들은 적 없고요.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는…… 교육부 산하, 과학고는 교육부 산하입니다.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는 과기부 산하인데 부처가 다른 데에서 설립이, 전환이 어렵다라고 기존 9억짜리 용역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해 달라는데 그걸 왜 갑자기 전환으로 해서, 실제 저거 추진이 안 된다니까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담당 부처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정확히 그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결과가 신설과 전환을 2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래서 사실 장단점이 신설과 전환 둘 다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책연구 결과에 나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 23일에 의원실에 공유를 드렸고요. 12월 말에 마무리가 됐고 저도 1월, 2월에 걸쳐서 수정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마무리가 됐고 3월 달에 공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가 신설과 전환 다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사실 지방에, 충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런 과학기술 영재학교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또 설립을 신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학령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결위 소소위에서 지금 전환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지역의 여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지역에, 거기 학령인구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 갈망하고 충남도가 그동안에 여러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사업이 갑자기 저렇게 바뀌니까, 학령 수요가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바뀐 것을 여기다 환치시켜서 그냥 보편적으로 하면 뭘하러…… 아니, 행정통합만 한다고 지방이 살려집니까?

저는 정주여건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영재학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중앙정부에서 계속 말을 돌려 가면서 무산시켜야 되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아니, 그래서……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공주의 과학고를 내포로 옮겨 가지고 영재학교로 전환이 되겠습니까? 공주의 과학고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교육부 재산인데 그것을 내포에다가 옮겨서, 그러면 공주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과연 전환이 되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거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래서 신설은……

○강승규 위원 그걸 그렇게 용역까지 해서 수년 동안 검토해 놓고 지금 이렇게 이걸 하면…… 아니,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의정보고서 다 낼 때 내가 이것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환으로 영재학교, 기존의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바꾸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사업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인 방법은—사실은 신설은 좀 어렵습니다—전환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과학고만 영재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승규 위원 과학고를 영재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래서 지금 교육부랑 지방정부랑 교육청이랑 많은 요구를 주시는 부분들이 일반고등학교도……

○강승규 위원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전환하는 것도 확대를 하든지요, 그러면.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방교육청하고 교육부 그리고 지방정부랑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학고만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나 특성화고 등을 전환할 때도 그것도 정부가 전환에, 이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실에 한 달 내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장관님, 챙겨 봐 주십시오. 총리님, 챙겨 봐 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속았다고만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분명히 기재부 과장과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책자 단계에서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종로구의 객상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객상언 위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객상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했지만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끝났습니다. 불과 2년 10개월 25일, 겨우 1060일 만에 파면 되었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것처럼 지난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 집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이네요. 그때 교수신문은 그 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2022년에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2023년에는 견리망의(見利忘義),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 2024년은 도량발호(跳梁跋扈),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이 사자성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거나 이익을 보면 정의를 잊거나 권력에 취해 날뛰면서 제멋대로 휘두르며 대통령이 되었다고, 정권을 잡았다고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고 무시한다면, 권력이 주는 이익에 취해 국가의 가치, 정의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권력에 취해 ‘비상계엄 선포 정도는 장난으로 할 수 있어, 계몽령이잖아’ 이렇게 날뛰다면, 다시 말해 피고인 윤석열처럼 권력을 행사한다면 권력을 잃고 재판을 받고 탄핵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고친다면, 눈앞에 이익이 있더라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의 가치, 정의의 가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추구한다면, 권력을 그 권력의 방향에 맞게 절제해서 사용한다면 윤석열 정부 같은 비참한 정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2025년 지난해지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혹시 교수신문이 선정한 그 해의 사자성어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5년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입니다. 변하고 움직여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역을 보니까 이 변동불거, 변하고 움직여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 뒤에 상하무상(上下無常), 윗자리도 정해진 것도 없고 아랫자리도 정해진 것도 없다. 위와 아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 뒤에는 강유상역(剛柔相易), 굳세고 단단한 것 부드럽고 순한 것도 서로 바뀌기 마련이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세상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강한 것이 늘 강한 채로 머무는 것도 아니며 부드럽고 약한 것이 늘 약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뒤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네 글자에 담긴 뜻이 국정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길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민석 총리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취약계층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이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등유,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5만 원 상향하는 에너지 복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곽상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형편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지방에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수도권에 10만 원부터 비수도권의 기초수급자 60만 원까지 이렇게 다층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국민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입니다. 규모가 4조 8000억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소비 진작 등 당초 목표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 대략 요약하면 이

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 기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결국 기름의 수요를 포함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결국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초과세수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위 통화량 자체에, 총통화량(M2)의 증가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상언 위원** 총통화 관련해서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민간자금이 단순 이전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물가상승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또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쪽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국은행 보고서하고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입장인데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의 확대 등 수요가 확대된다. 그 수요 확대에 따라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재정지출의 규모와 집행 시기, 재정사업의 구성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은 실질국내총생산이 잠재국내총생산을 하회, 그러니까 밑도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려도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의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실질국내총생산이 잠재국내총생산을 밑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근거인데요. 그것을 경제적 용어로는 마이너스 GDP갭이라고 하더군요.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앞서 제가 답변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한 이 추정 사업 지출 사업에는 물가 방어적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가 상방 압력을 저희가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박상언 위원** 지금 이 근거가 하나뿐이라 가지고 이것만을 가지고 확대재정을 해도 되는지 일단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실질국내총생산과 잠재국내총생산의 그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 갭 안에 지금 지출액이 포함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총수요 견인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 점을 반드시 검토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쭙볼 텐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예산이 매우 큼니다. 4조 8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후자의 입장, 그러니까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현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추후에 언젠가는 물가가 그만큼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에너지바우처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곽상언 위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에너지 취약계층,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고유가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이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해서 실행하는 사업이고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번에 5만 원 추가로……

○곽상언 위원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박홍근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건데요.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5만 원 상향한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검토보고가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추경안에서 등유·LPG 사용가구의 냉난방 등에 필요한 구입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연례적으로 발급액에 비해 실제 사용액이 저조하므로 그 원인 분석 및 절차 간소화 등 이용 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으로 증액된 이 사업의 증액분이 102억 원입니다. 이 102억 원 중에는 등유·LPG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데 100억 원이 배정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업 운영비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가리지 않고 이런 에너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증액된 에너지바우처 사업 증액분은 제안설명에 따르면 오직 등유·LPG를 대상으로만 집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맞다면 등유·LPG 등 이 에너지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연동해서 또 가스비가 오르고 하는 것 때문에 등유를 쓰거나 석유제품 그리고 LPG를 쓰거나 가스 이 두 계층이 더 추가로 연료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아닌가 싶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등유, 기름이지요. LPG, 가스입니다. 가스에 직접적으로 오른 것만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요. 전기도 실제로 장관님 설명에 따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에너지요금이 상승합니다. 그것도 한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오른 건 아니니까 그

건 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박상언 위원** 실제로 과거의 통계를 보게 되면 에너지 비용 연동에 따라서 그 정도 오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그 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상언 위원** 세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에너지바우처의 발급액 그리고 실제 사용 금액의 현황인데요. 보시면 2023년에는 4364억 원을 발급했는데 그중에 실제 사용된 금액이 2679억 원, 사용률 61.4%에 그쳤습니다. 2024년에는 발급액이 4850억 원, 실제 사용액은 3421억 원입니다. 사용률은 70.6%입니다. 2025년에는 사용률이 72.2%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이 전액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시면 실제 사용률이 61%, 70%, 72%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30%가량의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해 줘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1400억 원에서 1700억 원가량입니다. 매우 많지요? 이번 에 추경으로 배정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10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진되지 않은 금액은 12배예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보다.

그러니까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사용되지 않는 원인부터 해결해야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을 추경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전액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발급된 에너지바우처 전량을 소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두시는 것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보여 주신 통계대로 여전히 미집행 금액이 커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정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추정컨대 아무래도 어르신 인구나 장애인 인구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 위원님 죄송한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언 위원** 추경 예산의 지금 최소 12배 이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바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언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너지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행복카드에다가 에너지바우처를 충전해서 그것을 주고 국민행복카드 이걸 가지고 에너지요금을 계산할 때 그때 차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더 복잡하겠지요.

그래서 국회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자그마한 글씨로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지만 이 카드로 에너지요금 결제하기 어려워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요금에서 차감돼서 나오면

별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카드 발급받을 필요도 없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언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언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우선 이번 추경에 반영된 등유와 LPG 사용 가구 20만 기후민감계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은 아마 전기 등을 포함해서 발급률과 사용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발급률이 등유와 LPG 같은 경우가 97%고요 사용률은 98%, 95%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는 등유와 LPG는 그나마만큼 사용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 통해서 직권신청 방식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하절기의 바우처 통합은 작년에 통합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용을 앓거나 저사용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안내 사업도 신설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한 33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그러니까 안내 사업을 하고 홍보하는데 쓰이는 데 예산을 소요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간이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홍보하는 예산도 줄이고 사용률도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리고 전기요금은 알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공공요금은 동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혜택이 될 것이고, 현재 전기요금은 한 370만 가구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상언 위원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박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성준 박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율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예결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율의 조계원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이번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원유와 LNG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물류체제 공급망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일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

르는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확인되듯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사태는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임을 저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변화의 노력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에너지의 94%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새 판 짜기가 절실합니다.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급선 다변화와 전략적 비축,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구조 재편 및 대체 기술 발전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고속도로가 진작에 만들어져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단순한 송전선 건설을 넘어 국가경제의 대동맥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계원 위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띄워 났는데요. 지난해 7월 3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속도를 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뽕 뚫린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의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부는 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40년대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거기서 약간 오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개념을 쓰다 보니까 에너지고속도로가 마치 서해안이나 U자형 소위 고압 송전망을 에너지고속도로인 것처럼 아는 분들도 좀 있어서 에너지고속도로는 일종의 분산형 에너지, 양방향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한 오해를 감안하더라도 에너지고속도로의 필요성 그리고 큰 틀에

서 저기 화면에 보이는 서해안의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2단계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으로 가는 에너지고속도로, 이걸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겠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전체 에너지를 지산지소형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에너지 불균형이 있는 데를 고압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것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중의 하나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제가 알아보니 송전탑의 위에는 플러스가 흐르고 땅은 마이너스가 흐르는데 새벽이 되면 새벽 안개에 의해서 서로 간섭 현상이 생기고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폐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발생하고 전자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전망을 통한 에너지 전력은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쉽사리 돈을 얼마 더 준다고 해도 극복될 것이 아니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전류의 흐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공중으로 흐르는 것과 땅속에 흐르는 게 그렇게 교차하는 건 아닌데요. 심리적으로 위압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소음도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기후부에서는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을 원활히 구축하기 위해서 SOC 공동 건설, 즉 도로와 전력망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조계원 위원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와 전력망을 공동 건설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한반도 내륙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한반도 KTX 철도망과 전력망을 지중망으로 융합하게 되면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비해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공사기간과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중망으로 KTX 철로, 신설 철도와 함께 융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지금 25조 예산으로 KTX 철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중망으로 하게 되면 추가로 10조가 듭니다. 그런데 40년까지의 국가전력망계획에 따른 에너지고속도로 예산은 78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조만 투자해도 한반도를 직선으로, 지름길로 관통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성환 장관님께서도 지난 2월 12일 제가 주최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때 철도 전력망 융합 구상은 기존 송전탑 건설 방식이 수반하는 산림 훼손과 같은 환경적 부담은 물론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보상 비용 등을 수반하여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보내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도 유효하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고압 전선망을 연결해야 될 곳이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전남과 전북을 거쳐서 올라가는 고압 전선망과 한반도 KTX 연결 시

점이나 이런 게 만약에 유사하게 맞는다면 그것도 아주 유력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지난 1일 전남도가 3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은 한반도 KTX 철도와 에너지고속도로를 융합해서 함께 용역을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동안 총리께서 한반도 KTX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한반도 KTX 노선도를 보면—노선도 한번 띄워 주세요—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에 전라선이 지나갔던 전북 익산 지역이 빠지기 때문에 마치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데 한반도 KTX가 신설이 되더라도 기존의 전라선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익산역에서 전라선을 운영하는 편수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오히려 호남선이 증편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량은 변화가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경부선의 경우에도 서울-오송역 구간에 만성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한반도 KTX가 되면 그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증편도 가능하고 속도도 개선할 수 있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평택-오송 간 병목 현상은 2복선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쨌든 한반도 KTX가 되면 더 원활해지는 건 사실이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계원 위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KTX와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의 융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수와 고흥만 하더라도 지금 재생 전력이 풍력과 태양열 해서 17GW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의 절반만이라도 한반도 KTX를 타고, 에너지고속도로를 타고 용인이나 아니면 평택 등등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 KTX와 에너지고속도로의 융합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국가 대개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올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5차 철도망 계획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소요예산이 25조 원에서 27조 원 정도 소요되는 만큼 과거 4차 철도망 계획에 비추어서 고려해 볼 때 사실 예산상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점이 있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 때 10조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전이나 한전과 관련된 컨소시엄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만큼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한 10조 정도는 한반도 KTX에 추가 토지수용이나 주민수용성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컨소시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5조 정도만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총리님, 석유화학산업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거의 납사 공황까지, 지금 차단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갖기는 사실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은 전기료 인상입니다. 납사 가격은 전쟁 이전에 600달러 수준에서 10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고 LPG도 623달러 수준에서 지금 거의 1000달러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거의 80~90%의 원가 상승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 2021년만 해도 105원대였는데 2024년부터 182원대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석유화학산업의 원가 경쟁력은 거의 상실했다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이고 또 현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큰 틀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상실, 최근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시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떨어진 경쟁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건지 하는 문제는 약간 별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조계원 위원** 엇그저께도 당에서 중동 TF팀과 여수산단의 기업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일 급선무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 감면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인데 이것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전환시켜 주고 그 기간도 늘려 주고 전기료를 감면해서 일단은 당장 직면한 위기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높습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예전에 2021년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에 의거해 가지고 약 2202억 원의 전기료 감면을 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감면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 처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처방에도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인 대안은 납사 같은 경우는 NCC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납사 크래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고온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를 가지고 고온을 만들어서 분해하는데 SMR 기반의 고온가스로 기술을 개발하면 바로 고온을 발생시켜 가지고 납사 분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 더 높은 고온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소재 개발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SMR 기반의 고온가스로

실증단지를 여수에 구축하는 등 R&D 연구단지를 소재·부품·장치 산업으로 육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수 같은 경우 소재·부품·장치 산업, 첨단소재, 이제 AI 로봇이건 뭐건 전기자동차건 미래 소재는 다 첨단소재가 필요합니다. 고강도·고탄성의 첨단소재를 필요로 하고, 그것은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 산업의 기반 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전선업이 LNG선으로, 고부가가치 기술로 전환해서 성공했듯이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 산업도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부가가치의 스페셜티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산업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각 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서 한마디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에 상당히 정부의 관계 당국에서 쉽게 결정을 내지 못했던 전기료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전기료를 낮추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특별지역으로 하는 문제는 사실 취지는 같은 것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면이 있어서 과연 좋을지는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계원 위원** 당정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하여간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총리님, 해외 특정 국가의 방한 관광객 숫자를 일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국민 혈세를 펴고 쓰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지요. 특정 국가라는 게 전체적인 관광에 도움이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조은희 위원** 제가 여쭙볼게요, 안 되니까요.

문체부에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예산으로 정부 추경안 예산이 본예산 46억 원에서 무려 657%나 증액돼서 306억 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문체위에서 첫날부터 ‘이거 안 된다.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600% 이상 크냐?’. 특히 중화권인데 중국이예요. 중화권이

아니고 다 보니까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주장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수당이니까 25억만 삭감되고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하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언급됐던데요. 짐캐리 5억 원은 다행히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반드시 삭감돼야 되는데요. 중국발 한국 지방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예산이 100억 원이에요. 그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구체적 집행계획을 찾아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아 봤어요. 찾아 봤더니 중국 관광객 5만 명한테 1인당 오면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방하고 중앙이 매칭이에요, 40만 원 갖고.

그러니까 엇그제 대통령께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비 매칭까지 해서 국민 혈세로 중국 관광객이 1명 온다고 40만 원 주는 게 황당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특정 국가에 대한 순수 관광을 늘리는 데와 관련된 이유가 아닌 어떤 이유로 만약에 그런 정책을 쓴다면 적절치 않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시기에 가령 중국에서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조건이 형성돼서 그것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 투입에 비해서……

○조은희 위원 총리님, 그렇게 막 단서 다시면 안 돼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제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투입에 비해서……

○조은희 위원 중국 관광객 1명 오는데 국민이 40만 원씩 내야 돼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러니까, 잠깐만요.

○조은희 위원 400만 원 써도 그러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투입에 비해서 결과가 낫다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은희 위원 좀 챙겨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1인당 40만 원씩 준다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정책 성향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중국 관광객만 환영 부스, 짐캐리. 5억은 저희들이 삭감한 짐캐리……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본 바가 있고요.

○조은희 위원 그걸 혈세로 대접하려고 한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은 위원님 팬찮으시면 오히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관련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장관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이거 끝까지 여쭙보고 하겠습니다. 좀 여쭙볼게요.

그런데 중국 인플루언서 활용한 마케팅 예산이요 저희 작년에 본예산은 5억 원인데요. 지금 추경에는 11배가 늘었어요, 55억 원이에요. 이게 뭐냐,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요. 해서 한국관광 콘텐츠 만들고 중국의 유명 SNS 채널에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데 어떻게, 작년에 저희들이 한 달, 두 달 예산 심의해서 5억 원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경에, 전쟁 예산에 55억 원이 섞여 들어옵니까?

총리님, 이거 민생 예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쟁 예산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 문화관광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조은희 위원 문화관광인데요, 중국 관광객들한테 40만 원씩 주고 중국 인플루언서한테 본예산 5억인 거 11배 늘려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은 명료하게 지금 확인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좀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총리님한테 탄 거 여쭙 동안예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거 시간을 쓰셔야 되니까 하시고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잠깐요. 드릴게요.

진짜 이번 26조 2000억 원예요 지역 예산을 막 끌어 넣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 예산이 아니고 지방선거 예산이다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 문체위만 해도요 정부 예산에 없던 거 여당 위원들이 끼워 넣기 했어요. 그게 얼마나, 2900억 원입니다. 이거 본예산 심의 때 반드시 삭감하셔야 됩니다, 오해받지 않으시려면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전의 로드맵도 없어요. 서울예술단 사무국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전비용 2억 원,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9억 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5억이 증액되어 넘어왔는데요. 이거 이러면 안 되지요. 총리님이 바로잡아 주세요. 그 래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같이 논의하셔서, 저희가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토부장관님께 좀 여쭙게요.

장관님, 지난달 당정회의에서 ‘서울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집값이 안정되어 간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

○조은희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요, 방금?

○조은희 위원 안정되어 간다고 보시냐고요, 집값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강남 3구하고 용산은 과거에 비해서 상승세가 많이 꺾였고요.

○조은희 위원 제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강남권도요 지금은 매물이 8.8% 이상 줄었는데요, 서울 집값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강남 3구만 보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용산구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3월 18일 날 말씀하신 거랑 지금이 너무 다른데 지금 탄,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볼 때……

○조은희 위원 전문가 진단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문가도 여러 분이……

○조은희 위원 강남이 하락세라고 하는 거는요 일시적인 왜곡, 착시 현상이에요. 왜냐? 바겐세일이 끝났거든요. 바겐세일이 뭐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5월 9일이에요. 그래서 급매물이 나왔는데 지금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 강남 타령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열흘 만에 8.3% 강남구 매물 줄었어요. 그런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상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조은희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매물이 줄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5월 9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지금 아파트 매물이 하락세로 드러났는데, 판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이 판 세상 사시는 것 같아요.

○조은희 위원 장관님, 제가 판 세상에 산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쪽에 대해서 일정하게 집값이 상당히 떨어지고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조은희 위원 강남에요 60억짜리가 55억 떨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 바겐세일도 끝났어요.

제가 지금 다시 질문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60억짜리가 100억 되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조은희 위원 말 잘하신다고 장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 외곽의 아파트 가격이요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강남구 60억에서 55억 오르는 것 그것도 이제 끝났는데 그것 타령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막 몰리고 있어요. 어디로?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로 영끌 하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왜냐? 15억 이하 매매가는 6억 대출이 가능하니까 대출되는 아파트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한 달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관악·성북구 2배 이상 거래량이 증가했고요. 지금 노원은 1분기 상승률이 2.65%입니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이 1.96%인데요 벌써 한참 넘었잖아요. 그러면 강남 3구, 강남구 그거 기껏 60억짜리 55억 줄고 지금 그것도 이제 없어졌는데, 바겐세일 끝났는데 외곽에서 지금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영끌 하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정말 떨어지면 이 사람들 고스란히 피눈물 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어쨌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게 지향점이고요.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조은희 위원 제가 또 여쭙볼게요.

장관님, 지금 주택공급 얘기하셨는데 제가 전월세 물으려다가 주택공급 얘기하셔 가지고……

얼마 전 회의에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 것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어느 천년에? 참 한심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때 호텔 개조 사업이 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못 하려고 하고 계시는, 문재인 정부처럼 못 하려고 지금 달려가시는 거예요. 뭐가 다른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주택 공급했는지 알고 계세요?

○조은희 위원 상가 내에 시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주택이 공급됐는지 아세요?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윤 정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조은희 위원 상가 내의 수십, 수백 명의 소유자와 합의는 언제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은희 위원 말씀 좀 듣고, 저도 시간 없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조은희 위원 상가 내의 수십, 수백 명 소유자들 합의는 언제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상가 내의 수십, 수백 명……

○조은희 위원 상가가 주택 수에 포함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 그것은 다주택 아니지요? 다주택 또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요, 위원님,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조은희 위원 그 노력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A 방법, B 방법, C 방법, 오죽했으면 상가 공실을 한번 아파트로 바꿔 보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다는 게, 오죽했으면 그렇게 무능하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아파트,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데……

○조은희 위원 지금 신규 주택공급 절벽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난 3년 동안 전혀 공급이 안 됐는데……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급 절벽 상태니까.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조은희 위원 장관님은 모든 것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산주의 절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 말은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조은희 위원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시면 돼요. 그것은 왜 안 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취소해 주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조은희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말 쓰십니까?

○조은희 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물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지요. 아닌데 왜 정비사업, 민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민간정비사업 놔두고 전부 국가가 다 하겠다고 나서시니까 상가를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저한테 찾아오시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2분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지금 전월세 문제 심각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심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PPT를 보여 줄 수 있으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도봉·강북, 노도강 지역의 전월세 현황인데요. 도봉구 창동 1981세대 규모 동아청솔아파트 전월세 제로. 쌍용, 창동현대2차, 신도브래뉴1차 모두 뽕뽕뽕. 강북구 번동 900세대 뽕. 노원구 3000세대 월계그랑빌 겨우 전월세 2건 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저희가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와 월세가 좀 구분이 됩니다. 월세 문제하고 전세 문제는 좀 발생 이유가 약간 다른 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시간 끝지 말고 단답……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실제 전월세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10·15 대책보다요, 10·15 대책 이후에 지금 전월세 물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조은희 위원 장관님 본래 알고 계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오죽하면 ‘모른다 장관’이라 그랬겠습니까?

44.1% 줄었어요. 노도강 아파트 전세 매물은 60% 줄었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 재계약하는 게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없지요. 그러니까 전세는 없고 월세가 높아지고.

지금 서울 평균 월세값 얼마인지 아세요?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잘 모르겠는데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전월세 심각하다고 답하세요? 대책도 없으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전월세 문제……

○조은희 위원 1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전월세, 주택 공급하는 장관님이 그렇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다음부터 수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면 암기력 테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조은희 위원 암기력 테스트 아니고 기본입니다. 이것 모르시면 안 되지요.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쭙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월세·전세난이 심각한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것 다시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또 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아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지금 그 관련된 사업의 세부사업과 내역사업까지 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혹시 내가 기억을 못 하는지—저로서는 현재 지금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까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혹시 또 본예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일지라도……

○조은희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시지요. 제가 보충질의 신청해 왔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자료를 왜 제가 드립니까? 기획예산처장관님이 찾아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문체부장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문체부장관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거리가 가깝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우리가 외화를 벌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엄청난 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문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당 40만 원 그리고 지방매칭이라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아무리 들어 봐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장님!

○위원장 진성준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생중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처럼 호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혹시 질문하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것이라면 저희한테 좀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국민들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희는 아무리 지금 뒤져도 아직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미분한지 몰라도, 그러니 좀 그런 것을 주셔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국민들께 대표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관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뭘 잘못된 것처럼 비쳐져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물론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글썽, 그 말씀을 조은희 위원께서 보충질의 때 다시 물겠다고 하시니까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예산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는데, 그것도 저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질의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관계는 보충질의 때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긴 시간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이긴 한데 주질의 마지막이어서요, 사실은 보충질의가 있는데.

저는 총리님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시간이 된다면 행안부장관님한테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총리님, 저희가 이번에 이란·미국 전쟁 겪으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 경제안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어제 경제부처 대정부질의 때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우리 정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릴 테니 잘 정리하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도체, ICT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중동의 에너지 자원과 맞바꾸는 전략적 레버리지를 활용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있습니

다.

두 번째는 다자간 기술동맹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안보·기술·금융에서 그리고 중국과는 시장·공급망·제조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한쪽을 선택하는 양자택일로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장점을 극대화해서 양쪽 국가 진영 모두 한국 없이는 AI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다중성을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자간 기술동맹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데 관료조직의 장벽을 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관료조직을 묶어서 협업을 하게 만들고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판단해서 더 나은 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하는데요. 많이 들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전문가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주장하는 것이니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말씀의 핵심은 마치 이번 미국과의 마스가처럼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강점을 키우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중국 또는 다른 나라들의 핵심 레버리지로 만들면서 다변화해라 그리고 그것을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세워라 이 말씀이라고 이해하고요.

지금 대통령님의 생각도 대통령실은 그런 전략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실행은 정부로 맡기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은 가고 있고 실행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더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제가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26.2조의 추경 재원 중에서 1조가 국채를 갚는 데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채를 갚는 데 쓰는 것도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의 목적은 뭘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저희들은 초과세수로 하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초과세수를 전적으로 다 쓰기보다는 국가채무를 좀 갚아 주면 대외적으로 메시지도 좋고 국민들 보기에 또 좋고 그래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잠깐만, 단순한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기 위한 것 아니면 시장 안정 이런 것들이 목적인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럼요. 왜냐하면 그것 갚아 주니까 국채금리……

○임미애 위원 그러면 갚을 때 단기채를 갚으실 건가요, 아니면 장기물을 갚으실 건가요? 어느 구간을 갚으실 건지 계획이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국채시장은 국회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장기금리, 단기금리를 봐서요. 그리고 그게 갚을 때도 높은 고금리를 갚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임미애 위원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저는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먼저 갚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이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1조가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실행합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래도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어디에 먼저 갚을 것이다라는 계획들이 서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금리가 높은 것 중에서 정부가 갚아 가지고 유리한 것을 하겠다고요.

○임미애 위원 저는 시장금리 구조를 관리하는 정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조 원이라는 제한된 재원으로 국채를 상환한다면 효과가 미미한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중심으로 아주 타깃팅해서 금리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재원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정부가 하여튼 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또 감안해야 되니까요.

○임미애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미애 위원 요소, 암모니아, 인광석,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이게 뭔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어디에 쓰어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비료 재료들입니다.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이것 비료의 원료입니다.

요소와 암모니아는 질소비료 핵심 원료고요. 인광석과 칼륨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살펴봤는데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비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정부 단독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민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료 기업이나 농협이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비축하는 방식도 직접 비축하는 게 있고 민관이 공동 비축하는 게 있고 기업의 재고 관리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잠깐 짧은 시간에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위원님, 비축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 이번에 가서 한번 살펴봤는데 남해화학 가서 보니까 비축 같은 것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원료를 공동구매하는 민간기업들이 해서 원료를 들여오면 물량을 사전에 1년 전에 1년 치 물량을 농업인들로부터 말하자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원재료를 들여와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공급망안정화법에 의해서 이게 비축 원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보여 주시면 나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으로 요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소가 공급망 위기 저희가 벌써 21년도부터 네 번을 겪었어요. 그런데 차량에 쓰이는 요소수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비료에서 쓰이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이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결국 비축되어 있는 양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기업의 재고 물품이 비축되어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예산 시기가 되면 농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요구받는 게 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무기질비료.

○임미애 위원 무기질비료 얘기입니다. 예산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롯값이 오를 것 같으면 인상하는 것의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근본적인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국가전략물자인데 왜 국가 비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에너지처럼 전략 비축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거예요, 원유처럼 대규모 국가 비축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회의가 열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안전을 가지고 왔는지를 살펴봤더니 식량안보만 가지고 안전으로 다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식량안보를 얘기하면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법씨를 어떻게 우리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터 나가면서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농자재 지원법도 올해부터 가동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공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지원하는 정책은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단기 임기응변 정책에 불과합니다. 화학비료의 경우는 WTO 감축대상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거기다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필수농자재법 제정할 때 이렇게 가격구조 정책으로 일관하면 농가가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니 이런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농가가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가 비료 관리 정책을 좀 짜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게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이런 위기 상황 맞으니까 이런 필수농자재 같은 것들이 관리 방안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공공비축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완효성비료를 채택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홀토람이라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정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농가들하고 같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스템도 좀 만들까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 꼭 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안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사태 벌어졌을 때 비료값 다시 인상이 되니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임미애 위원 저는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께서 알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특히 작년에 대형산불 등 또 홍수, 산사태라든가 이런 재난이 거듭됐던 경남북 지역의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이직하는 숫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잠깐 볼까요?

경북도청하고 5개 시군, 그러니까 지난번에 산불이 났던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여기 재난 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휴직이 전년 대비 58.3%가 늘었습니다. 경북 본청은 62.5%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재난 담당 공무원이. 본청을 포함해서 5개 시군 전체 공무원이 6222명인데요, 재난 전담 인력이 4.2%입니다. 26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이들의 이탈 속도가 일반행정직보다 2.4배나 높습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 이해가 갑니다, 왜 이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저희가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재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수당을 인상한다든가 통상……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말씀하신 돈으로 이것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NDMS 시스템은 너무 후졌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그냥 두면 어떤 사람들이 와도, 아무리 인력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저는 재난 담당 인력들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재난을 당한 사람들 속에 차 있는 울분을 공무원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산불특별법 통과되면서 지금 추가 지원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존 항목의 누락분, 둘째는 신규 신고, 셋째는 가장 까다로운 증액 요구 및 추가 피해 신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우가 문제인데요. 기존의 내역과 새로 접수된 내역을 대조해야 하는데 재난시스템에는 자동 중복 대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AI 강국 얘기하는데 좀 무색할 정도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인적사항만 연동되고 과거에 상세 신고를 해 났던 내용이나 지원 확정 내용이 연동되지 않아서 공무원이 일일이 다 건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누락인지 증액 요구인지 아니면 미인정 건에 대한 재신고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26년도 NDMS 기능 개선 수요조사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기한이 1년인데요, 어제 자로 해서 NDMS에 추가 피해 신청이 벌써 1만 건이 넘었는데 작년에 신청한 게 4만 5000건입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앉아서 다 해야 됩니다. 1만 건이 넘는 거를 작년에 올라왔던 4만 5000건하고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대량 추가 신고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서 중복 체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미애 위원** 이것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상반기 중에 보완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업무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도모를 해 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난 담당 직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 또 상대적으로 일이 힘들고 재난 피해자분들, 유족들과 만나다 보면 이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하고 그리고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재난부서에 근무를 하면 그 승진 연한을 깎아 줘서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NDMS 빠르게 손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환경부장관님, 이 정부 들어서 혹시 원전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 원전 하기로 하고, 11차 전기본에 있는 것 하기로 하고 또 ‘에너지 믹스를 적절히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해서 참 다행스럽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재생에너지만 있고 원전, SMR이라든지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없고 수소도 예산이 추경예산에 전혀 없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환경하고 붙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것 알고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것 또 그것도 우리 방향이고 그래서 저도 반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원자력발전하고 태양광발전하고 대기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어느 것이 높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건 둘 다 무탄소 전원이라 기후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종배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뭐 석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한 삼사십분의 1 정도, LNG에 비해서도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원재료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IEA에서 발표한 것 보면 그래도 원자력이 범위는 있지만 좀 낮고, 풍력하고 원자력하고 비슷하고, 태양광은 조금 더 높고, 한 2배 정도 나오고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1kW당 원자력이 한 10~20g 정도 되고 풍력은 15g, 태양광은 60g, 석탄은 900g, LNG 500g 이렇게 차등을 뒤 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원전도 우리가 SMR 같은 걸 좀 더 속도감 있게 나가야지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더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수소에 대해서 장관님 들어오셔서 가지고 이 청정수소 입찰시장에 대한 공고를 지난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이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린수소는 인정을 안 하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어디다 쓸 거냐였는데 해외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를 가져다가 석탄발전에 혼소하겠다고 해서 석탄발전소에 혼소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봤더니 실제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수소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수소를 싸게 들여와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한다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사용처가 석탄발전소에 혼소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일반 수소발전 입찰은 인정을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국내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종배 위원 그다음에 국내 청정수소 생산설비가 부족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빨리해서……

○이종배 위원 이것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취지랑 아마 제가 같을 텐데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국내 수전의 수소 생산설비 산업을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상임위에서 하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총리님께 간단히 여쭙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행정 통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것 비수도권만 하는 거지요, 비수도권? 광역만 합니까, 기초도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광역이든 기초든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광역 통합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자율적으로 하되 인센티브를 주고?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종배 위원 5국 3특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충청북도는 여기저기에서 다 빠져 가지고요 여기는 충남·대전 하는 데 붙이리는데 충남·충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뉘어진 게 1890년대예요. 한 130년이 넘었는데 이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정서상. 그렇게 따지면 전북도 광주·전남에 합쳐야 되고 이렇게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지로 붙여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또 제가 기회되면 여쭙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김민석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할 때 충북까지도 같이 큰 틀에서 함께 합의가 되면 그것도 바람직하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시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충북의 여론과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자율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충북 같은 데는 이것저것 안 걸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지난번에 청주에 오서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그랬는데 후속으로 잘 이루

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총리님,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중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어디가 제일 비싼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일 비싼 데요?

○천하람 위원 예, 한국·미국·중국 중에.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일 것 같은데요?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총리님께 여쭙본 게 원래 우리 국민들의 통념 내지는 상식이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서 그게 산업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아마 오늘 이걸 보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게 사실 굉장히 예전 얘기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사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도 석유화학산업의 전기요금 인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태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슬라이드 준비됐으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실제 석유화학업계 전기요금 부담 차트인데요. 22년도에 전기요금 1조 4000억을 쓰던 것이 24년도에 2조 17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중·미 중에, 한국·미국·중국 중에 한국이 제일 비싸고요.

매출원가도 22년도에는 한 2.07%대였던 게 원가의 5.11%나 차지하는 수준으로 원가 부담 자체가 비중으로서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이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렵고 중국의 추격을 넘어서 추월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 이 부분이 석유화학산업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당장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도 아까 총리님께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입장이 될 것 같고 혹시 박홍근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어제 권향엽 의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선 현재는 산업위기의 선제적인 대응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특별위 기지역으로 그다음 단계로 갔지 않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과거에 조선산업이 특별위 기지역일 때도 사실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공요금 동결을 또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더 수요가 큰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추경의 문제와 석유화학업계 등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에 놓인 것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바로 등치시켜야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 예산 부처의, 예산 장관님의 고뇌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전쟁 추경 얘기하고 여러 가지 위기라고 하지만 석유화학산업은 이번엔 중동 분쟁,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가지고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정도라도 면제해 주자라는 안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장관님께서도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관련 부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김성환 장관님, 그리고 이게 사실은 조금 행운이라면 행운이게도 석유화학산업의 산단들이 주로 에너지 자급률이 좋은 지역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 차등제가 적용이 빠르게 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지역요금제……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적용이 되면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언급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몇 월 정도 시행을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지금 전체적으로 송전요금하고 전력자립도하고 또 국가균형발전지수 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제가 박홍근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지역별 차등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도 사실은 그렇지요, 보통 남부지역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 차등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석유화학산업 너무 힘들고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한시적인 조치, 전기요금 감면조치가 좀 고려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영구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타임 윈도우(time window)를 정해 놓고 하는 방안은 충분히 그래도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소위 단계에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논란이 있었던 일인당 40만 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 문체부가 기획예산처에 보낸 자료 보면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확대,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100억에 팔호 열고 20만 명 공급하기 5만 원 돼 있어요. 제가 이게 이상해서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수석전문위원이 문체부 담당한테 주고받은 건데요. 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억 요구했고 5만 명, 40만 원, 지자체 50% 매칭입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담당이 답변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기획예산처 속여 가지고 일단 예산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받고 20만 명이 아니고 5만 명한테 일인당 40만 원씩 주려고 했던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정부는? 서로 속고 속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겁니까?

○**조은희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중국 관광객 1만 명, 일인당 40만 원을 주기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닌 거지요?

○**조은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조은희 위원** 계산이 아니고요. 문체부 담당이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해석해 보기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중국 관광객 일인당 40만 원씩 우리 정부가 평평 써 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그러려고 계획안을 냈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결위에 온 예산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문체부장관이……

○**위원장 진성준** 이에 대해서 문화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는 전혀 처음 보는 거고요.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 하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조은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와 관련……

○**조은희 위원** 아니, 제 시간이……

○**위원장 진성준** 알겠습니다. 시간 잠깐 정지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강하게 이견을 제시하고 계신 거고 그 문건도 좀 제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 자료를 주시면서 얘기를……

○**조은희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해서 보이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복사해서 주세요.

○**조은희 위원** 복사해 드리세요.

○**위원장 진성준** 무슨 문화체육부가 제출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다면서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정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체부장관님……

○**조은희 위원** 우리 보좌관님, 우리 방의 보좌진 계시지요?

이것 드릴까요?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의사과 직원이 잠깐 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좀 받아서 좀 전해 드리세요. 전해 드리고……

○조은희 위원 제가 문체위에서 물었는데 장관님 잘 모르셔 가지고요 지금 총리님한테 여쭙 겁니다.

○위원장 진성준 장관께서 그 문건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의 하고 시간 좀 드리고 답변하도록……

○위원장 진성준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아니요, 저도 이걸 처음 듣는 얘기여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모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다 취재를 했겠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확인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조금 흥분해서 가지고 무슨 ‘중국 전세기, 일인당 5만 원’ 이 얘기를 요청한 자료다 하고 그다음에 카톡 얘기를 하셨어요.

○조은희 위원 카톡이라니요.

○위원장 진성준 그래서……

○조은희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보고 흥분해서 잘못 말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진성준 그러신 것 같아서……

○조은희 위원 그러신 것 같다니요!

○위원장 진성준 일인당 40만 원이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카톡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문화부가 무슨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낸 자료에는 ‘전세기, 일인당 5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더 취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진성준 예, 알겠습니다. 취재해서……

○조은희 위원 문체부 담당 직원은 4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5만 명. 그거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장님……

○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 문서는 아니니까 그 카톡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경위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부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는 해당 담당 직원이, 그러니까 문체부의 직원이 아마 의원님실의 어떤 보좌진에게 확인한 내용을 말씀……

○조은희 위원 아니, 우리 당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 수석전문위원께. 그러면 그 문체부 담당 직원이 누군지를 정리해 주시면 바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질의를 그다음으로 넘겨서 진행을 하

시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그 직원을 지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문체부의 그 직원을 특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은희 위원 제가 지웠습니다. 문체부 직원 불이익 당할까 봐요.

○위원장 진성준 무슨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조은희 위원 알아서 찾아내십시오, 담당이니까.

○위원장 진성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예산서에 없는 사업인데……

○위원장 진성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산 담당자가 몇 명 안 돼서요 저희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일단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고……

○국무총리 김민석 잠깐만요. 일단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면 문제가 안 될 뿐더러 중간에 누가 얘기했던 것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왜 그러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20만 원에 5만 원 씩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 거고요.

○조은희 위원 이것 시간 끊어 주시면 제가 말을 할게요.

○위원장 진성준 시간이 끊어져 있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건 없고, 잠깐만……

○조은희 위원 문체부장관님.

○조계원 위원 한국 지방 무슨 전세기 사업이라면서요.

○조은희 위원 장관님,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저가항공 지원 사업이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조은희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조계원 위원 인당 40만 원이 아니고 저가항공 지원하면서 그 비행기 한 대당 지원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진성준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화부장관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체위잖아요. 그거 헷갈릴 수 있어요.

○조은희 위원 아니, 그거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고. 좀 가만히 계시고요.

○위원장 진성준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정부의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또 말씀하실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문을 마저 진행하시겠습니까, 시간은 계속하는 걸로 하고?

○조은희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다른 질문을 마저 계속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님.

○박형수 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무슨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은희 위원 부총리님이 지금 답변을, 계속 불러도 답변을……

지금 제 시간을 다시 해 주십시오, 3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저 지금 답이 와서……

○위원장 진성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정리했으니까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나중에 답변 기회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그러니 2분 45초? 2분 50초부터……

○조은희 위원 57초였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2분 57초부터 다시 개시하십시오. 다른 질문을 먼저 진행하시고……

○조은희 위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조은희 위원님의 질의가 일단락되고 나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지난해 11월 6일 날 제가 지방세,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계획이 있느냐고 여쭙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은희 위원 이것도 진실 게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 이러면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국토부장관도 진성준 위원장님도 보유세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국민들은요 지방선거 전에는 보유세 인상 안 하고 지방선거 끝나서 내년에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보유세 인상 계획 어떠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연구기관의 얘기도 듣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하고 비교 이런 것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애매하신데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것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얼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

○조은희 위원 서울이 18.67, 강남·한강벨트 23% 넘게 했습니다. 서울 작년 대비 보유세가, 공시가격이 50% 올랐어요. 동대문구 150배, 서대문구 11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때 세금 폭탄 의견 듣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처장관님, 지금 방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3월 27일부터 시작됐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이 4억 원입니다. 229개 지자체 하면 2억 7000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거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일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 들어 왔습니다.

○조은희 위원 0원입니다, 0원. 전쟁 예산이라고, 민생 예산이라면서 이거 지자체당 2억 7000원만 넣어 놓고 중국 예산은 600% 증액하면서 이것은 0원이에요. 어떻게 이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향후 5년간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고요. 이것은 지방비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뭐 많은데……

통합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하는 것을 구체적 검토하실 계획 있으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까지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계획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정 취약 지자체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는 모든 중앙정부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법령에 근거해서 그런 거라면 당연히 지방 우대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향후에도……

○조은희 위원 국가 책임이라면서 지자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중앙정부의 지원이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지금 시범적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 책임이라면서 법은 만들어 놓고 지자체한테 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에 0원 하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미 그것은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는 속의 정도의 서비스를 하나로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제가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요.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부장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 제 자료 주십시오, 아까 드린 자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사진을 좀 찍으세요. 그리고 드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가져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답은, 위원님께서 보좌관이 질문한 내용은 이번 추경에……

○조은희 위원 보좌관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번 추경에 반영된 그 사업이 아니고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물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 거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그 사업 예산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이고, 두(頭)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들어가세요.

○조은희 위원 제 것 주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그냥 들어가실 문제는 아니고요.

○조은희 위원 내일 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아까 추경에 일인당 40만 원씩, 중국인 일인당 1명씩 지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은희 위원 내일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계속 질의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면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장관님, 그러면 저한테 계속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셔야지요.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진성준 박홍근 장관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조은희 위원 제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자료 돌려드리도록, 복사하고 나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문화부장관께 확인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인당 4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결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없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진성준 그렇다면 아까 문화부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조은희 위원께서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해된 사업은 무엇인가, 이번 추경과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이다…… 지방공항 활성화 사업입니까, 그것이? 그 지방공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방공항 활성화 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다 빠진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왜 문화부 사업이 되지요? 이건 국토교통부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방공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장 진성준 지방공항을 이용한 관광……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방공항의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진성준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애당초 문화부가 이번 추경 사업의 일환으로 검토한 바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내일 하시지요, 내일 확인해서요.

○위원장 진성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확인해 주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들어간 사안은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러니까 제가 박홍근 장관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사업 부분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없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물론 정확한 정보나 자료를 갖지 않고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몰랐을 때는 그걸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께 이게 지금은 소위…… 아까 중화권 관광객 추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일인당 40만 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혈세를 펄펄 쏟아붓는 것처럼 이렇게 첫 질의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짐캐리와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에 그 사업을 설계할 때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의 단체관광객들에게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을 대상으로만 한다고 하니……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그건 수용하겠다고 제가 예결위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아예 근거도 없는 사업이 마치 추경에 편성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성준 아니,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 일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가?’ 제가 물었더니 문화부장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박홍근 장관께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진성준 그런 사업 항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사업은 무엇인가, 문화부의 답변은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사업은 이번 추경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은희 위원 (단하에서)

아닙니다.

○조계원 위원 (대기석에서)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조은희 위원 (단하에서)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닙니다. 지금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조계원 위원 (대기석에서)

아니, 한 해 동안 6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40만 원 채우려면 얼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추경 예산도 증가하는 금액이 돼요.

○조은희 위원 (단하에서)

왜 저한테 화를 내요?

○조계원 위원 (대기석에서)

아니,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진성준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잠깐만요. 고정하시고요.

○조은희 위원 (단하에서)

질문을 하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조계원 위원 (대기석에서)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위원장 진성준 조은희 위원님, 의사……

잠깐 정숙해 주세요.

조은희 위원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문체부에서 제가 가진 서류를 갖고 아직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계원 위원 (대기석에서)

예결소위에도 끝까지 안 있었잖아요!

(「아이, 참 나. 조계원 위원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는 위원 있음)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얻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조은희 위원 그런데요, 이 사업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전세기 지원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100억 있습니다, 사업이요.

그래서 문체부에 물어보니 지방비 매칭 200억이고 40만 원이랍니다. 5만 명에 1인당 40만 원. 제가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장관은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고 기재부장관님은 무조건 없다고 부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정부가.

○위원장 진성준 그 사업 명칭을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조은희 위원 핸드폰으로 봐야 돼서요.

○위원장 진성준 정부에서 받아 가신 자료는 왜 돌려드리지 않는 겁니까?

○조은희 위원 중국발……

○위원장 진성준 중국발……

○조은희 위원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위원장 진성준 한국 지방 전세기……

○조은희 위원 연계 관광……

○위원장 진성준 연계……

○조은희 위원 연계 관광상품.

○위원장 진성준 관광상품.

○조은희 위원 예, 100억.

○위원장 진성준 그게 100억이에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그게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조 위원님,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추경 사업내역을 한번 다 보십시오. 어디에 그게 있는데…… 아까 그래서 보니까 분석을 하셨다며요, 찾아봤다며요, 그런데 내역사업에 있다며요. 그걸 보여 주라니까요. 추경 내역사업 어디에 있습니까? 그 두꺼운 책자, 지금 전문위원하고 뒤의 당직자들, 보좌관들은 다 갖고 있을 테니까 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조은희 위원 문체부에 드린 서류 주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추경 내역사업, 세부 내역사업에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걸 강조하세요!

○위원장 진성준 기획예산처장관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는 건가요?

○이소영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 사업이 구체적인 무엇인지 문화부에서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문제는 내일도 종합정책질의가 있고 문체부장관님과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내일도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일 더 정돈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의가 조금 헛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이라는 예산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 말씀하신 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지금 혼재되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이어 가기보다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하고 내일 조금 더 정리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진성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정리했던 것처럼 지금 조은희 위원께서 제기하고 계시는 문제의 사업,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내일 종합정책질의가 재개되자마자 바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이 금시초문이어서……

○위원장 진성준 글썽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저희가 소상히 확인해서……

○위원장 진성준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를 내일 회의 때 설명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이 남아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여수를 출신 조계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예결위, 문체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끝까지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은 그 자리에 끝까지 없었고요.

이 문제를 제가 다 논의했었는데 1인당 30만 원 지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40만 원을 5만 명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서 200억입니다. 문체부의 증액된 예산이 306억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를 이걸로 지원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무근입니다.

장관님,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조계원 위원 짐캐리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인천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배송 서비스를 말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공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

○조계원 위원 짐 무게에 따라서 2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원래 당초 계획은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5000원 할인쿠폰 수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국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을 대상으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지요? 중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국민의힘은 중국인한테 정부가 공짜로 다 해 주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왜 장관님은 가만히 계세요? 특정 국가, 중국만 퍼주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기본 취지조차 모르고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항의하셔야지요.

그리고 해당 추경으로 인해서 관광객 50만 명이 더 들어오면 1조가 넘는 관광수익이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조 원 외화가 골목상권에 뿌려질 낙수효과, 얼마나 큼니까? 지금 중동 전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관광업계에 큰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 부처 장관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요.

총리님, 지금 중동 전쟁 여파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장에도 직격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예술인의 연소득은 국민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 체육인은 23.6세 나이에 은퇴해서 38%가 무직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민생의 사각지대가 엄존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대통령께서도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이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88억 원 정도의 강사료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건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무 부처와 교육 당국이 예산 떠넘기기만 하고 핑퐁게임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영화계 상황도 절박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해서 한국 영화계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시점에 있는데요. 이 시점에 또 고유가·고물가 악재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작 위축은 콘텐츠 공급 절벽이라는 산업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수 침체기일수록 우리 관광이나 문화예술을 통한 국부 창출 또한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소득 탄력성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체육 부분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런 부분에…… 특히 지금 일본으로 가려는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시장이 우리 한국으로 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에 1조 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200만 명이면 4조가 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중국 관광, 중화권 관광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이걸 국민의힘은 무조건 중국 지원 예산으로 격하하고 폄하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아마 내일 문체부장관이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 이번 문체부 소관 추경예산안 5843억 중 무려 40%에 달하는 2018억 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출돼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정작 체육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 다. 결국 남의 잔치에 밀려만 대주고 정작 주인은 굶기고 있는 예산 돌려막기 아닌가 이 런 불만이 지금 체육계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위원께 미리 좀 답변을 드린 바가 있 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지난 본예산의 경우에도, 문체부 전체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11.2% 늘어나는 동안에 체육 분야는 고작 1.5% 늘어난 데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을 민생의 외곽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가 제안했던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은 3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는 2.3배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기 자도 3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지원 이 무색하게도 오히려 재외동포 전국체전 참가 예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재외동포 체 전 참가 예산 지원은 지역의 숙박·식당·매출로 직결되는 민생의 마중물이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1400명 정도 옅니다. 이것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기금하고 관광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기금은. 그리고 복권에서 많 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문예기금은 매우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래서 해마다 체육기금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보장돼 있는 방식이 고요. 다만 향후에 기금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만 당 장에 있어서 체육 분야와 관련된 추경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으니 그러면 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저 희가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여 향후 소위에서 심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 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문체위 예결소위에서 체육 분야 예산을 한 1000억 가까이 반영시켰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물론 거기 중에도 추경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걸 또 증액 단 계에서는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을, 이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많이 제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하여튼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안은 벼랑 끝에 몰린 체육인과 체육 시설,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생계 보루입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마이크가 꺼졌나요?

○위원장 진성준 예, 꺼졌습니다.

○조계원 위원 잠깐만 좀 더 얘기를……

○위원장 진성준 서면으로 하세요.

○조계원 위원 잠깐만 하면 됩니다.

색동원 사건 아시지요, 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조계원 위원 색동원 사건으로 입소자 전원이 성폭행을 당했고 남성 장애인 입소자들 까지도 신체적 폭력·학대가 자행돼서 폐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시설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색동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요가 너무 많고 급하다 보니까 또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 지금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고요.

결국 핵심은 그런 요구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추경 목적에 부합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비비 사안이나, 그것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더 살펴야 될 것이냐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이게 전쟁 추경이라는 추경 목적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또한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색동원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시설 이전이 없으면 그러면 그 색동원에 계속 머물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진성준 조계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소위에서 살펴보고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그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짐캐리, 짐 배송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이 좀 많이 왜곡돼 있고 또 내일 예결위에서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을 지방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2만 원 이상의 배송 비용 중에 5000원의 할인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료로 어떤 특별한 짐 나르기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 교육부장관인데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

문체부 소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실제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꿈을 주기도 하고 많은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 지적하시면서 이번에 문체위에서 88억도 넣어 주시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185억 원 신청해서 지금 심의 검토가 진행 중이고 심의 끝나는 대로 5월에 교부해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혹시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나 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실은 예전 수준으로 원복이 필요한데 88억 원은 최소한, 그걸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조계원 위원님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발언 순서를 대기하다 좀 늦어졌는데…… 9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걱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란 전쟁 상황이 지금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누가 관리할 것이냐, 전쟁 복구 비용을 대라. 이란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대라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핵 자체를 없애라고 그러고 서로 맞지 않는 주장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 상황이라는 게 정말 에너지 위기 상황에 좀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국가부채비율이, 경제부총리님 올해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추경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1조 원을 갚았기 때문에 51.6%에서 50.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20조를, 십몇조를 갚았으면 훨씬 더 낮춰졌겠지요. 오늘 우리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총리님 배석하셨지요? 이런 것들이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남아 돈다고 평평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은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요, 아실 테고.

오늘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가 분기별 최대 흑자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걸 정말 크게 기뻐할 일이지는 하지만 그러나 2023년·2024년 세수 결손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정말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집중해도 모자랄 예산을 소모성으로 선거 앞두고 있다고 이곳저곳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쏘다가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 운용에 직

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희들은 피해를 받는 계층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하나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재정 관리 준칙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재부에서는 포기한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포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재정 관리 준칙을 너무 단기간 내에 하다 보면 재정에 신축성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축소 경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최형두 위원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되면 이런 이야기로 재정이 자꾸 확대되고 저희 정부 때는 아낀다고 하다가 결국 또 민주당 정부 되면 확 늘어나서 준칙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기재부라는 것이 준칙을 지키고 준칙에 목을 걸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지난 정부에 보면 좀 줄었는데, 예를 들면 재정규모 조정을 2.5%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의무지출을 쓰고 나면 재량지출이 없어서 성장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부총리님하고 공직자들, 특히 저희들이야 선출직이니까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선거에 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무조건 매진해야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료제, 정말 지혜의 집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대국가의 산기둥인데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을 갖고 일을 해야지.

독일은 우크라이나전쟁 같은 위기상황에도 특별기금을 엄격히 관리해서 일시적 세수 증가분은 반드시 차기 연도 부채 감축에 우선 배정하는 부채제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독일은 그렇게 해서 최근에 AI 대전환이 늦어져 가고요, 그리고 독일은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형두 위원 독일은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저희들은 AI 대전환이라든지 GX 전환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많이……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님께,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키셔서…… 정치권은 자꾸 돈을 더 풀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짐캐리 이야기 나오셨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지방에 국제 크루즈 취항, 마침 마산항도 아홉 번째 항이 되었습니다, 전북의 새만금항과 함께.

국제 크루즈의 관광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걸 바로, 지금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수도권에 주로 큰 혜택이 누려집니다만 크루즈는 바로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모두 9개 시도, 그러니까 부산·울산·속초 모든 시도에 다 크루즈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천 명이 들어오거

나 몇백 명이 들어오면 그 관광효과가 바로 지방의 정말 쇠퇴한 경제에 미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진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경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크루즈와 관련된 항목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최형두·윤후덕·조계원·임미애·이재관·김한규·안도걸·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님 또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배경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속기사들과 의회경호과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각까지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49인)

강승규	고민정	곽상언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상욱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재원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배준영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윤후덕	이강일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종배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성준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최형두	한기호	허성무	황정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최철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김민석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교육부

장관 최교진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책기획관 정상용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정책기획관 이주열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하녕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차관 임기근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직무대리 박현희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이성진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보고사항】

○위원장 사임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6. 1. 9.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2026. 1. 8.
한병도	진성준		2026. 3. 11.
.	김현정		2026. 3. 20.

○의안 회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됨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9)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0)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2)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3)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4)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5)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6)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7)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8)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9)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0)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2)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3)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4)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5)

이상 17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통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의 예비심사기간을 4월 7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9)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0)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2)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3)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4)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5)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6)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7)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8)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49)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0)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2)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3)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4)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55)

이상 17건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의 예비 심사기간을 4월 7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하여 통보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